

(성공회대 민/운/연 포럼 08-1)

2008년 1월 <민/운/연 포럼>  
**2007년 17대 대선 그 이후**  
**: 대한민국, 어디로 가나?**

조희연(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 소장/사회학)

이광일(성공회대 민주자료관 부관장/정치학)

박순성(참여연대 운영위원장. 동국대/북한학)

☆ 일시 : 2008년 1월 4일(금) 오후 2시부터

☆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사회 : 조효제 (성공회대/사회학)

★ 토론 :

: 정해구 (성공회대/정치학)

서복경 (전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원/정치학)

손석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원장)

조승수 (진보정치연구소/소장)

박상훈 (휴머니타스 주간/정치학)

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 / 민주자료관

2008년 1월 <민/운/연 포럼>

---

## 2007년 17대 대선 그 이후

: 대한민국, 어디로 가나?

### <자료집 목차>

조희연, '신자유주의 지구화 시대의 정치'와 신보수정권 .....	1
이광일, 2007 대선 평가와 향후 전망: 진보정치의 입장에서 .....	39
박순성, 2007년 대선, 진보·개혁 진영은 무엇을 배울 것인가 .....	54

---

### <포럼 진행 시간 구성>

- 2시 5분 개회 (5분)
- 2시 10분 : 사회자 소개 및 모두 발언 (5분)
  - 2시 55분 : 발표시간 각 15분 (총 45분)
  - 3시 45분 : 토론시간 각 10분 (총 50분)
  - 4시 : 중간 휴식시간 (15분)
- 4시 30분 : 발표자 답변시간 각 10분 (총 30분)
- 4시 55분 : 토론자 재토론시간 각 5분 (총 25분)
  - 청중과의 자유토론시간 (35분)

※ 발표자 재량시간 (30분) : 토론이 뜨거워지면 오후 6시까지  
약 30분간 여유 시간이 있습니다.

♣ 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는 지난 2004년 4월부터 <민/운/연 포럼>을  
통해 학술적·실천적 현안에 대해 의미 있는 소통과 대화의 장을 열어왔습니다. 이번  
2008-1 포럼도 그 일환으로 준비되었습니다.

# ‘신자유주의 지구화 시대의 정치’와 신보수정권

## -- ‘신보수 정권’ 시대 개막의 의미, 전망, 과제 --

조희연

(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 소장)

http://dnsm.skhu.ac.kr; [chohy@skhu.ac.kr](mailto:chohy@skhu.ac.kr)

### <목 차>

1. 들어가면서--신성장연합의 출현 .....	1
2. 2007년 대선에서 진보개혁세력의 패배를 규정한 다양한 선행 요인들 4	
1)성찰의 방법론 .....	4
2)다양한 성찰지점들 .....	5
3. 신보수정권의 출현배경과 구조적 성격 .....	10
1)구 보수와 신보수의 차별성과 연속성 .....	11
2)진보개혁세력의 대선 패배의 원인 .....	12
3)신보수정권의 성격과 향후의 위기적 요소 .....	16
4. 신자유주의 지구화 시대의 신보수정권에 대응하는 진보개혁의 전환의 과제--신보수 시대는 진보 편터멘털의 급진적 확충을 요구한다 .....	20
1)급진민주주의적인 대항담론과 비전--제도정치적 차원 .....	22
2)진보의 사회적 편터멘털을 강화하기 위하여--사회적 차원 .....	30
5. 맺으면서-사회경제적 개혁주의를 실현하는 새로운 ‘반신자유주의 정치’ 를 통해서 아시아 민주화의 새로운 경로를 .....	37

### 1. 들어가면서--신성장연합의 출현

긴 대선 레이스가 끝났다. 국민은 지난 5년간의 통치세력 혹은 진보개혁세력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막내린 대선레이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성찰이 시간이 될 것 같다. 특별히 2007년 대선은 민주적·개혁적·진보적·좌파적 세력에게는 진보개혁세력에게는 통절한 반성의 시간이 될 것이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유행가

가사도 있는데, 보다 ‘발본적인’ 성찰을 통해서 더욱 풍부하게 진보개혁세력이 혁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필자도 진보적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회한과 반성이 든다. 이 발표조차도 망설이게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대선 이전의 전과정에서 지식인으로서 ‘공동책임’을 느껴야 할 부분도 많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성찰적 정리 자체도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머리를 비우는 심정으로’ 이 발표를 준비하였다. 이 발표가 진보개혁세력의 폭넓은 성찰을 위한 토론의 한 소재가 되기를 바란다.

이 글은 먼저 ‘성찰의 방법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서술하고자 한다. 그 바탕에서 여러 가지 반성적 성찰의 지점들, 그리고 반성의 내용들을 서술하게 된다. 다음으로 이명박 정부를 ‘신보수정권’<sup>1)</sup>이라고 규정하면서 그것의 의미와 그것이 진보개혁세력에게 던지는 의미 등을 검토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신보수 시대에 ‘진보의 재구성’이라는 문제의식 하에서 제도정치적 차원에서의 혁신과제와 진보의 ‘사회적 편더멘털’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을 서술하고자 한다.

## 민주개혁연합의 퇴조와 신(新)성장연합의 출범

2007년 12월 한국에서의 대선<sup>2)</sup>은 아시아 민주화의 여러 경로<sup>3)</sup>에서 ‘신보수 정

- 
- 1) ‘신보수(new conservative)’라고 현재 두가지 용례가 일반적으로 혼용된다. 첫째 신보수라고 할 때 80년대 이후 영국의 대처(Thatcher)정부나 미국의 레이건정부와 같이 이전의 상대적인 진보개혁정부---영국의 경우 노동당 정부 혹은 미국에서는 카터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새롭게 기업친화적인 정책, 신성장정책을 주도하던 정부를 지칭하는 경우이다(B. Jessop은 이러한 신보수정권의 핵심특징이 신성장주의이며 이는 과거의 복지국가의 ‘1국민프로젝트’를 해체하고 ‘2국민프로젝트’의 출현으로 규정하였다. B. Jessop, Thatcherism: a Tale of Two Nations, Cambridge: Polity). 둘째 미국의 레이건 정부와 같이 보수당 정부 중에서도 이라크 전에서도 보여지는 바와 같이 ‘공세적 개입전략’을 구사하고 가족 가치 중시, 낙태반대, 동성애 반대 등과 같이 ‘기독교 근본주의’적 경향을 드러내고 있는 흐름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전자의 의미에서 사용한다. 단지 한국에서의 ‘신보수’라고 할 때의 ‘신(新)’은 60·70년대의 구 보수와 구별된다고 하는 한국적 의미에서의 ‘보수의 전환’을 의미한다.
- 2) 2007년 12월 대선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2389표(48.67%),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 617만4681표(26.14%), 이회창 무소속 후보 355만9963표(15.07%),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137만5498표(5.82%),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 71만2121표(3.01%), 이인제 민주당 후보 16만708표(0.68%)를 얻었다. 이명박과 이회창은 보수계 후보라고 할 수 있으며 정동영과 문국현 후보는 중도(개혁)자유주의 계열 후보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후보는 2위 정 후보보다 531만7708표를 더 얻어 민주화투쟁으로 1987년 직선제가 부활된 이후 최다 표차 기록을 세웠다. 이명박 후보의 당선으로 한나라당은 1997년과 2002년 대선 두 차례 패배 뒤 10년 만에 정권탈환에 성공했으며, 권력의 중심 축은 진보 진영에서 보수 진영으로 옮겨가게 됐다.
- 3) 한국을 포함하여 아시아의 민주화과정은 대단히 복잡한 경로를 밟는다. 민주화과정의 복합적 갈등 속에서 나타나는 민주화의 한 경로로서 ‘역류(逆流)의 경로’를 이야기할 수 있다. 2006년 9월 태국의 군사쿠데타는 이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민주화의 ‘역류’의 경로를 경험하던 태국에서 2007년 12월 총선에서--군사쿠데타로 해체된 ‘타이락타이당’을 계승하는---‘국민의힘당’이 과반수 이상을 획득하는 새로운 전환이 나타나게 되었다(탁신이 1998년 타이락타이당(TRT)은 2001, 2005년 총선에서 다수파의 지위를 확립하였는데 쿠데타 이후 국민의힘당(PPP)을 창립하여 총선에 임했다. 국민의힘당의 승리는, 물론 쿠데타로 인한 정치적 정당성 부재 뿐만 아니라 쿠데타 이후의 해외직접 투자의 감소, 성장률의 둔화와 같은 신군부정권의 새로운 도전들이 총선에서의 탁신그룹의 부상을 결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탁신정부의 ‘경제적 민주주의’ 정책에 의해서--도시 보다는--존재하던 농촌의 지지기반이 2007년 총선에서 ‘국민의 힘당’의 정치적 지지기반으로 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민주화과정에서의 복합적 갈등에 매개된 역류적 흐름이 다시 국민적 저항에 의해 새로운 전환의 경로를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필자는 최근 아시아 민주화에 대한 비교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조희연, 2007,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와 경제적·사회적 독점의 변형적 재편”, 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 심포지움, 2007.11.15., 배재학술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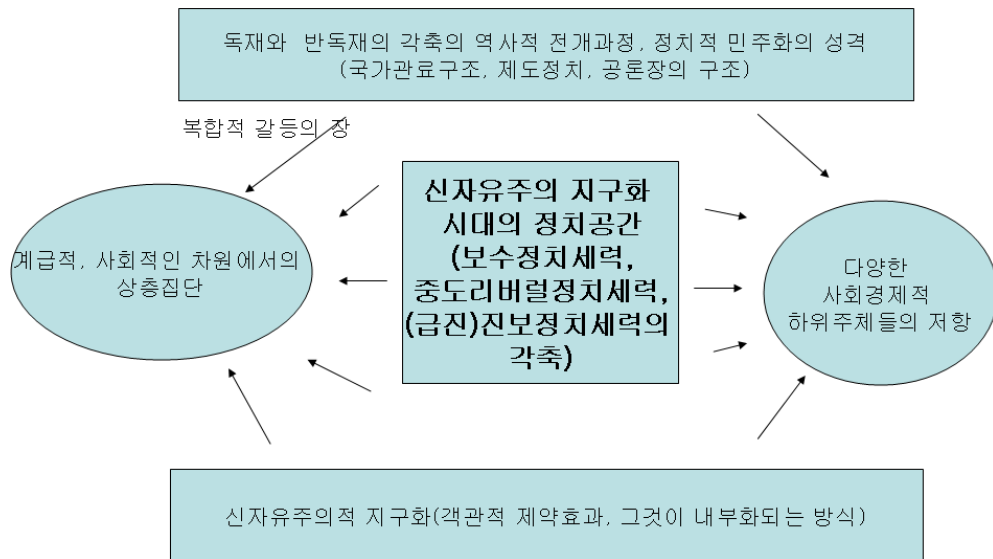
권'으로의 이행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경로가 출현했음을 보여준다. 정치적 민주화에 있어 상대적으로 선도적인 경로를 밟고 있었던 한국에서의 이러한 전환은 전반적인 아시아 민주화 경로에도 상당한 파장을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의 입장에서 보면, 2007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은 '신(新)성장연합'의 출범을 의미한다. 이것은 한국사회의 '순환의 사이클'이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여진다. '1차 성장연합'은 박정희를 정점으로 하는 개발독재세력의 의해서 주도되었다. 1차 성장연합은 그 주도세력의 '군부독재'적 문제점과 1차 성장이 동반하는 사회경제적 모순에 적절히 응전하지 못해 저항연합에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 저항연합은 '반독재연합'의 성격을 띠면서 동시에 '평등연합(평등을 지향하는 연합 혹은 분배를 제고하고자 하는 분배연합)'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평등연합은 87년 이후에는 '민주개혁연합(구 독재체제의 민주주의적 개혁을 지향하는 연합)'으로 표현되었다. 연합은 상이한 이해와 요구를 갖는 집단들과 세력들, 대중들을 하나의 '헤게모니적 지향'을 중심으로 결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2002년 대선에서 평등연합은 '한 단계 높은 민주개혁'을 표상하는 집단으로서 다양한 요구와 이해를 수렴하는 지향으로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5년 후 민주개혁연합은 균열되었다. 2002년에는 세대, 계급계층, 지역 등의 여러 층위에서 민주개혁연합이 기존의 보수적 성장연합을 압도하였으나, 2007년의 대선에서는 진보개혁진영이 '포스트-민주개혁'의 비전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반면에 신보수 후보는 새로운 성장담론을 통해서 압도적으로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신성장연합은 87년 이후 진행되어온 시장과 자본에 대한 '민주주의적 규제'를 거부하고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에 조응하는 '탈규제'와 '친기업적인' 정책, 국가의 적극적인 성장제고(提高)정책을 추구하는 것을 핵심적인 특징으로 한다.<sup>4)</sup> 이것이 '긴 신보수시대'의 서막인지 '신자유주의 지구화 시대의 불안정한 정권교체'의 패턴을 말해줄 지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어렵다. 그러나 2002년 평등협합이 '어렵사리' 다수파가 될 수 있었다고 한다면, 2007년에는 '50%에 육박하는 신보수 후보의 지지', '15%를 넘기는 또 다른 보수후보의 선전(善戰)'을 고려한다면, 진보개혁세력의 입장에서서는 치열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대선평가와 향후 전망을 '신자유주의지구화 시대의 정치'의 역동성이라는 프리즘으로 조명하고자 한다(여기서의 정치는 정당정치, 정부의 통치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한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현재 한국에의 제도정치 내에는 보수정치세력과 중도리버럴 정치세력, (급진)진보정치세력이 존재한다. 과거 보수세력은 독재적 보수세력으로 존재하여 왔고 중도리버럴(중도자유주의세력)은 반독재적 중도리버럴세력으로 그리고 90년대에는 '민주개혁적(민주개혁을 추동하는)' 중도리버럴세력으로 존재하여왔다.

4) 역사불력이라는 것을 그람시는 사회구성체적 수준에서 사용하였다. 그러나 미시적 수준이나 중범위적 수준, 중기적 수준에서 만일 이를 사용한다면, 2002년의 역사불력과 2007년의 역사불력은 상이한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중도리버럴세력의 집권기라고 할 수 있는 참여정부가 지지를 상실하면서 구 독재적 보수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신보수세력’의 집권이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계급적 차원에서의 상층집단, 기득권집단과 다양한 사회경제적 하위주체집단들(노동자계급, 서민 등)의 갈등은 정치공간에서 투영되면서 변형되고 해결되고 갈등의 소재가 된다. 87년 이후 민주화에 의해 이러한 ‘민주주의적 정치공간’이 복원되었는데, 이러한 정치공간은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라고 하는 거대한 세계체제적 조건 속에서 대단히 불안정한 상태로 작동하고 있다. 필자는 신자유주의 지구화 시대의 정치(넓은 의미에서의 통치를 포함)의 불안정성 속에서 큰 틀에서 신자유주의 시대의 정치의 과제를 사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 2. 2007년 대선에서 진보개혁세력의 패배를 규정한 다양한 선행 요인들

### 1) 성찰의 방법론

올바른 반성을 위해서 나는 몇 가지 우리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을 이야기하고 싶다. 먼저 ‘국민을 탓하는’ 식의 반성이 아니라, 국민이 이명박을 선택하게까지 이른 ‘우리들’의 문제를 직시하는 형태로 반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처럼 지난 시기를 복기(復棋)하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집단에 대해서 통렬한 반성의 칼날을 들이대야 할 것이다. 심지어 보수세력이 우리에게 던진 비판까지도 우리의 반성의 소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둘째, ‘복합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하는 점이다. 단색(單色)화된 성찰이 아니라 다양한 성찰이 여러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색화된 비판은 우리 사회에 ‘지식인’적 분석이 ‘과잉대우’를 받기 때문에 나타나는 점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분석은 ‘지식인적 일반화’ 속에서 몇 가지 규범적 판단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다. 복합적 성찰은 어떤 의미에서 ‘지식인적인 규범적 분석’을 넘어서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복합적 성찰은 성찰의 주체와 ‘주체의 위치’에 따라서 상이한 비판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통합신당,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시민사회는 각각 다른 시각에서 이번 대선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

셋째, 대선 패배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고 그 중에 노무현 개인의 캐릭터(character)도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노무현 통치세력의 문제도 있다. 노무현 세력의 ‘실패’가 진보개혁세력 일반에게 깊은 암운(暗雲)을 드리우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대로 중요요인으로 설정하면서, 동시에 노무현 개인에게 모든 문제를 환원하는 식으로 성찰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럴 경우, 대선 패배에 작동한 거시적·구조적·세계체제적 요인들, 진보개혁 세력에 내재한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드러나지 않는다. 성찰은 ‘외재적인’ 한 요인으로 환원되어 버리고 단순화되게 된다.

넷째, 비판적 분석은 단순히 구조적 분석만이나 ‘주의주의’적 분석이 아니라 구조를 고려하면서도 ‘주체적’ 요인의 문제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분석을 의미한다. 여기서 주체적 요인을 고려한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참여정부 5년의 전기간에 중요한 고비고비에서 우리가 ‘어떤 다른 어떤 전략적 행위’를 했을 것인가를 되돌아보는 분석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행위만이 아니라 ‘내가 그 위치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었을까’, 그리고 ‘그들의 전략적 선택’과 다른 선택을 했을 때 나타나는 도전은 어떻게 응전했을 것인가 하는 식의 분석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복기(復基)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통해서 진보개혁진영 일반의 한계점, 취약점, 문제점, 치부를 드러내고 공론화하고 대안을 찾는 방식으로 성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정부의 실패 속에서 가능한 많은 부분을 다양한 교훈들을 우리가 길어내야 한다.

## 2) 다양한 성찰지점들

대선평가와 관련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차원과 쟁점들을 성찰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여정부의 ‘실패’는 크게 보면 객관적 요인과 주체적 요인이 복합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객관적 요인은 국제적 요인과 국내적 요인이 있을 수 있으며, 주체적 요인은 전략적 실천의 방향의 문제와 전략적 실천의 방법론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5년이나 10년 후에 재집권을 하게 된다면 노무현 정부와는 다른 경로를 밟기 위해서 어떤 다른 경로를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응답하는 식의 반성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지적하는 여러 요인들 간에서는 상호관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그러한 인과관계적 서술을 여기에서는 하지 않는다. 후반부에서는 필자의 입장에서 향후의 전망을 정리하게 될 터인데, 여기서는 단지 평면적으로 복합적 성찰을 위해서 다가한 쟁점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 (1) 객관적 요인

### A. 국제적 요인

#### ①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거대한 제약효과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거대한 흐름은 많은 나라에서 집권세력을 친시장적인 정책을 선택하도록 강제하며 이를 역류하는 정책선택을 대단히 어렵게 한다.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하에서 친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취하는 정권이나, 혹은 거의 모든 집권세력들은 불안정성을 경험하게 된다. 남미에서는 친미정권이 친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취하고 반대로 저항세력이 반미적인 ‘신(新)사회주의’ 정책을 취하는 경우도 나타난 반면에, 지구촌의 다른 나라에서는 정반대로의 경로를 드러낸다. 한국에서는 반독재 중도리버럴 정부가 개방화를 추동하는 역설적 상황이 나타나게 됨으로써 상황은 반대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앞서 이야기하는 바로 신자유주의지구화 시대의 정치의 불안정성이다. 신자유주의적 지구화가 기본적으로 ‘분배정책’이나 경제적 ‘포섭(inclusion)정책’의 경제적 기초와 선택범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이념적 색채가 다른 정권들 대다수가 불안정하다고 할 수 있다.

#### ② 분단체제와 한미동맹체제의 거대한 ‘체제적 제약효과’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라는 지구적 조건 뿐만 아니라 1953년체제라고 표현되는 이른바 ‘미국의 제약한계(American boundary)’라고 하는 것이 작용하고 있으며, 그러한 미국의 제약한계는 외부적 힘일 뿐만 아니라 내부적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 B. 국내적 요인

#### ① 보수의 균열되지 않은 강고한 기반과 계급적·사회적 역관계

이른바 ‘53년 체제’와 ‘61년 체제’로 상징되는 계급적·사회적 역관계가 87년 이후 20년의 민주화과정에서도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전 시기에 구조화된 계급적·사회적 역관계가 변화하지 않았다. 여전히 한국의 보수는 강고하고, 보수는 ‘진보’의 실패로 쉽게 ‘권토중래(捲土重來)’하는 상황이 나타났다.

#### ② 지역 및 풀뿌리 수준에서의 보수의 강고함

87년 이후 민주화 20년은 중앙정치적 수준에서의 ‘다원경쟁체제’의 성립에 불과하고 풀뿌리 수준과 지역수준에서 여전히 보수의 대중적 기반이 강고하게 존재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시민사회운동도 사실 중앙정치권력과 중앙경제권력을 ‘향한’ 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고, 중앙정치적 수준에서의 ‘역전’이 곧바로 지역 및 풀뿌리 수준에서의 ‘대역전’이 나타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 ③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를 받는 ‘민주개혁 의제’의 고갈

쉽게 국민들이 동의하는 민주개혁 의제들이 민주화에 따라 실현되어 갔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같이, 첨예한 갈등과 보수적 저항을 수반하는 ‘민주개혁 의제’ 영역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또한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저항이나 상호갈등을 촉발하는



의제들의 영역에 진입하게 되었다.

#### ④ 보수적 언론권력의 '왜곡효과'와 적절한 대응 부재

노무현 정부의 '통치의 미덕' 부재는 보수적 미디어로 하여금 쉽게 중도리버럴 정권의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동아일보가 최근에는 가장 선도적이라고 보여지는데, 노무현 정부의 초기 인사에는 '코드인사'라는 규정을, 이명박 정부의 인사에는 '실용인사'라는 규정을 부여한다. 이러한 이중적인 보도태도는 동아일보의 '보수성'을 잘 말해주는데, 이러한 보수적 언론권력의 '왜곡효과'에 대해서 시민사회 및 민주진영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민주노동당도 이 점에서는 예외가 아니다. 사실 어떤 점에서 중도리버럴 정부의 정책도 '좌파정책'으로 규정하는 동아일보 등 언론권력의 공세에 대해서 진보세력은 그것이 중도리버럴 정부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보조를 맞춘 지점이 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부메랑'이 되어 진보진영 일반의 공신력을 훼손하는 식으로 작용했다.

또 하나 시민사회운동도 '증세나 감세나'의 구도에서 참여정부의 세금정책 일반을 보수적 미디어가 '세금폭탄'이라고 규정하는데 대해서 회피하거나 우회한 점이 있었다. 앞으로 민주노동당이나 시민사회 세력이 복지국가로 가는데 놓여 있는 조세저항을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해가고 국민들을 변화시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물론 참여정부는 많은 '허점'을 드러내고, '책잡힐 소재'들을 많이 제공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언론권력의 '보수적 대중교양'은 대단히 용이했다.

#### ⑤ 정당의 사회적 기반의 취약성

정당의 사회적 기반, 특히 중도리버럴 정당의 사회적 기반이 대단히 취약하다. 지역주의를 넘어선 전국적인 중도리버럴 개혁정당의 사회적·대중적 기반은 여전히 유동적이다.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파괴적 영향 속에서 그 기반은 더욱 유동적이 되었다. 반독재와 민주개혁을 통해서 스스로의 사회적·대중적 기반이 유지되어 왔는데, 이것이 균열되면서 지속적으로 중도리버럴 정당의 사회적 기반이 불안정해졌다.

아시아의 민주화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상을 볼 수 있다. 중도리버럴세력의 사회적 기반이 일관되게 불안정하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는 중도리버럴 정치세력이 사회경제적 진보정책을 선택해서 자신들의 대중적 기반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공간을 제약시킴으로써 더욱 강화된다.

87년 체제 하에서 정당의 사회적 기반은 지역주의에 의해서 구조화되어 있었다. 2004년 다수당이 된 열린우리당은 호남의 '저항적 지역주의'---영남의 '보수적 지역주의'와 구별되는--와 일정한 '민주개혁을 지향하는 전국적 개혁주의'의 결합이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의 실정으로 민주당이 호남의 '저항적 지역주의'를 일정하게 전유(專有)하게 됨으로써--혹은 지역주의적 세력들이 그 균열을 확대시킴으로써--중도리버럴 정당의 대중적 기반은 급속히 균열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는 '보궐선거'에서 지속적으로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한나라당이 승리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이명박의 신보수의 기반은 영남의 지역주의를 넘는 기반 창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 (2) 주체적 요인

### A. 방향성의 문제

#### ① 노무현 정부의 친(親)삼성적 성격

삼성이 ‘국가포획’에 나서고 자신들의 이해를 ‘법을 통해서’ 까지 실현하고자 하는 데는 참여정부가 삼성과 대단히 친화적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이 중요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와 대기업 일반의 관계와 달리, 정부-삼성의 관계는 대단히 유착적으로 나타났다.

② 개방화와 시장중심적 구조개혁의 파괴적 결과를 상쇄하는 적극적인 ‘사회정책’을 취하지 못함

박정희와 태국의 탁신은 자신의 붕괴 이후에 많은 지지자들을 남기는데, 왜 거의 ‘거덜나는’ 외양을 보이게 되는가. 국가권력 담당세력으로서 5년을 재임했는데도 말이다. 2002년 노무현 지지세력의 지지는 소멸하고 새로운 지지층이 형성되지 못했다. 사실 참여정부 하에서 사회경제적 개혁정책을 통해서 대중을 획득하는 경험들이 누적되었더라면 역전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자산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③ 중도리버럴 정치세력이 ‘정치적 개혁주의’에 매몰되고 ‘사회경제적 개혁주의’로 무장하지 못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하여 386정치인 다수는 ‘정치적 개혁주의’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개방화와 시장중심적 구조개혁으로 인하여 양극화 등 새로운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대중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새롭게 ‘사회경제적 개혁주의’로 전환함으로써 응전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였다. 예컨대 4대개혁입법도 기본적으로는 ‘정치개혁입법’인데, 사회경제적 의제를 중심으로 대격돌이 전개되면 그것은 설령 그것이 실패하더라도 많은 대중적 ‘각성’과 ‘의식고양’의 계기를 남기는데, 중도리버럴 정부의 보수와의 대치선이 주로 정치개혁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그것은 대중들의 경제적 불만 속에서 파문히고 말았다.

#### ④ 적절한 제도적 개혁의 부재

현재의 보수, 중도리버럴, 진보의 경쟁구도는 이전에 개발독재가 만들어놓은 제도적 구성, 민주개혁과정에서 변화시킨 제도적 구성 내에서 작동하게 된다. 대통령제 대 내각제의 구도, 대통령제 하에서의 결선투표제도,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 등 등의 제도는 경쟁의 결과 자체를 규정하는 측면이 있다. 민주정부는 기존의 제도적 구성을 전제로 하여 존재했고 이런 점에서 대안적인 제도개혁을 진보개혁세력 일반이 사고하지 못했다.

### B. 방법론적 측면

#### ① ‘통치의 미덕’의 부재

노무현 대통령의 여러 가지 ‘비(非)헤게모니적’ 언술이 조선일보 등의 보수적 미

디어로 하여금 참여정부를 ‘희화화’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통치의 미덕’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지 못한 것은, ‘저항의 미덕’과 ‘통치의 미덕’에 대한 구별의 사고가 개혁세력 일반에 존재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예컨대 시민사회운동은 일종의 ‘도덕적 원칙주의’의 기초 위에서 활동하는데, 노무현 정부는 이런 점에서--공정적인 점이기도 한데--일정 의제영역에서 시민사회의 ‘도덕적 원칙주의’를 견지하면서 활동하였다. 시민사회에서도 그렇게 행동하기를 요구했고, 그것을 벗어났을 때 지지를 철회하였고 이는 참여정부의 지지기반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이 점에서 시민사회세력과 통치세력 간에는 분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시민사회세력은 문제를 ‘원칙적’으로 제기하고 ‘비타협적’으로 문제해결을 지향해야 하지만, 통치세력에게는 반드시 이것이 미덕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때로는 타협적이거나 때로는 여러 이해의 ‘접합능력’이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 ② 관료에의 포획

최장집 교수가 지적하는 대로<sup>5)</sup>, ‘선출된 정치엘리트’들이 행정엘리트로서의 관료들에 포획되어 버리는 상황. 이명박 정부의 친시장적·친기업적 정책은 다수 관료들의 지향과 별로 다르지 않는데, 참여정부에서는 괴리가 존재하는데 이를 주체적으로 돌파하지 못하였다. 이런 점에서 진보개혁세력 일반에게, 대안적인 ‘국가운영능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가기구와 국가관료들의 제도적 복합체로서의 국가를 어떻게 대안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친기업적인 ‘신보수주의적 국가운영’ 모델과는 상이한 ‘사회적 국가운영’의 구체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③ 저항을 최소화하는 ‘헤게모니적 정책수행능력’

사실 하나의 정책을 수행하는 데에는 많은 저항들이 뒤따른다. 이를 극복하고 우회하는 정책실행능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시민사회운동에서는 ‘개혁 대 반개혁’ 등 ‘도덕적 이분법’이 필요하지만 국가운영 상에서는 더욱 복합적 시각이 요구된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정책의 ‘찬성집단’ 대 ‘반대집단’의 경계를 허물면서 양자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이들을 인식하면서 반대그룹들의 일부는 찬성그룹으로 전유하는 능력도 요구된다(예컨대 전시작전권 환수에 반대하는 장성들을 ‘별달고 거들먹 거린다’고 표현하는 언술전략에 대해서 성찰해보자).

이를 조세저항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해보자. 대선 패배의 최대의 실패 중에 하나는 ‘6억 원 이상 1가구 주택보유자’에 대한 중과세이다. 사실 복지국가로 가는 경로에서 조세저항을 돌파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만일 민노당의 집권이 이루어진다면 ‘세금폭탄’이라는 보수언론의 용탄폭격을 넘어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도 나타날 수 있다. 2가구 이상 주택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중과나 ‘양도세’ 중과는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이 적는데, 6억 원 이상 1가구 주택보유자들에 대해 ‘분당 집 팔고 이사가면 되지 않는가’식의 관점을 가지고 대응한 점은 정책수행상의 능력부족을 말해주는 것이다.

5) 최장집, 2005,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후마니타스. 3부 5장 참조.

#### ④ 정책집행자로서의 '신뢰성(credibility)'의 상실

참여정부는 정책집행자, 혹은 국가권력 운영자로서의 신뢰성에 깊은 회의를 받는 상황이 나타났다.

#### ⑤ 정책적 시뮬레이션(simulation) 능력의 부재

어떤 하나의 정책을 시행했을 때 동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의도하지 않은 효과'에 대한 '예견적 검토능력'이 부재하였다는 것이다. 사실 민주화의 한 차원으로서의 분권화의 과제로서 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 이전 등이 시행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지역 수준에서까지 땅값을 상승시키고--여기에 수도권의 땅값은 하락하지 않으면서--그것이 전국적인 땅값을 동반 상승시키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점을 예견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다면 보완적 정책을 동시에 시행했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 ⑥ 중도리버럴 세력이 바람직한 정치규범과 문화를 창출하지 못함

여러 가지 점에서 386세대 정치인들이나 열린우리당 등 중도리버럴 정당이 새로운 정치규범과 문화, 관행을 정착시키지 못했다. 예를 들면, '배가 침몰해가는데 서로 먼저 살기 위해 배에서 먼저 뛰어내리는' 행태도 있었다. '신념에 따라 행위하고 그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는 태도도 볼 수 없었다. 경선 승복에 대해서 오히려 보수적인 박근혜 후보가 '민주주의적 경선 룰'에 승복하는 '승복의 미덕'을 보여주었고 반독재운동의 배경을 갖고 있다고 하는 손학규 후보가 이를 보여주지 못한 역설적인 상황이 있었다. 386정치인들의 많은 경우 '삼성장학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 3. 신보수정권의 출현배경과 구조적 성격

대통령 선거과정은 구조적 변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과정적 변수, 주체적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단순화할 수는 없으나, 위에서 서술한 점과 연관해서 몇 가지 점만을 중심으로 한국에서의 신보수 정권시대의 개막을 분석해보자.

한국에서 1961년을 기점으로 개발독재 시대가 열렸고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민주개혁시대가 열렸다고 한다면, 민주개혁을 둘러싼 복합적 갈등을 경과하여--2007년 12월 대선에서 보수세력의 승리함으로써--신보수 정권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이는 신보수주의 시대의 개막이라는 점에서 신자유주의 지구화 시대에 아시아의 많은 나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민주화의 새로운 경로를 반영한다고 생각된다<sup>6)</sup>.

6) 필자는 한국에서 이러한 신보수 정권시대로의 전환을 거쳐 다시 '재전환'의 기회가 주어지고 더 높은 수준의 변화로 이행할 것인지는 것이 향후의 각축의 소재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아시아 민주화의 선도적인 사례로서의 한국은 상대적으로 정치적 민주화에서 일정한 선도성을 보이면서 '자유민주주의적 개혁'의 단계를 경과하였고 다시 한단계 높은 '사회(적) 민주주의'개혁단계로 이행하는 거대한 전환의 병목지점에 도달했다고 판단했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아래와 같이 말한 바 있다. "한국사회는 일종의 거대한 교착(膠着)국면에 처해 있다. 이 교착에는 두가지 주체가 존재한다. 한편에서는 개발독재 및 87년 이후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한 거대한 계급적.사회적 기득권세력이 존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대단히 높은 수준의 평등주의적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 1) 구 보수와 신보수의 차별성과 연속성

신보수 정권의 성립은 분명 한국정치변동의 맥락에서 보면 ‘보수의 진화(進化)’라고 표현해야 할 것이다. 먼저 신보수 정권이라고 할 때의 신보수는 구(舊)보수와 한편에서는 차별성을 다른 한편에서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차별성이라는 견지에서 보면, 신보수정권은 경제적 측면에서 초기산업화 단계의 개발독재와는 ‘구별’되는 포스트-독재 정부이고, 또한 신보수는 과거의 구 반공주의적 보수나 ‘안보형 보수’와는 구별되는 ‘시장형 보수’ 혹은 신자유주의적 보수<sup>7)</sup>로 특징지워질 수 있다. 구보수가 국가개입주의와 보호주의를 표방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신보수는 시장자유주의와 개방주의를 표상한다. 60·70년대에는 세계경제 내에 ‘보호주의적 경제공간’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 보수정권은 국내시장에 대해서는 보호주의적 정책을 취했으나 신보수정권 WTO, FTA 등으로 상징되는 지구화 시대에 개방화와 탈국가 시장주의정책을 전면화할 것이다. 정책적으로 신보수는 중도를 포괄하는 이른바 ‘실용주의’, 신성장주의적 정책기조를 추진할 것이다. 정치적 측면에서, 신보수는 독재정권 시대를 특징지은 ‘독재 대 반독재’, 민주화 국면에서의 ‘개혁 대 반개혁’의 구도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세력의 집권을 의미한다<sup>8)</sup>. 태국에서의 군사쿠데타는 역설적으로 독재 대 반독재, 개혁 대 반개혁의 구도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면, 신보수의 등장은 과거의 독재 대 반독재 구도에 대해 해체적 효과를 동반할 것이다. 여기서 신보수가 시장형 보수 혹은 신자유주의적 보수라고 하는 성격이 중요하다. 신자유주의 지구화 시대에 보수적 정치세력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돌이켜 보면 60·70년대 구 보수는 개발독재적 보수였고 그런 점에서 한편에서는 독재 혹은 권위주의라고 하는 성격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초기산업화 단계의 개발주의세력이라고 하는 성격이 있었다고 할 수 있

---

서 민주화 20년, 반독재 ‘민주정부’ 10년에 실망하는 대중이 존재한다. 여기서 교착은 더욱 진보적인 방향으로 이러한 국면이 타개되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힘이 부치는’ 상황이며, 반대로 우리 사회의 계급적·사회적 기득권세력은 자신들이 원하는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재편(이것이 통상 이야기하는 ‘신자유주의’적인 시장자유를 지배적인 원리로 하여 움직이는 사회로의 재편이다)을 지향하고 대중들을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고 그것이 일정하게 성공하고 있지만 대중들의 평등주의 의식이나 기대수준이 높아 그런 방향으로 일관되게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착적 상황은 ‘반독재 중도자유주의적 정치세력(열린우리당 등)’이 집권한 참여정부 하에서 대중들의 사회경제적 삶이 더욱 어려워지면서--최소한 그렇게 느끼면서--그 대중적 지지기반이 붕괴하면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여기서 민주노동당 등 급진진보적 정치세력은 새롭게 그것을 대체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현실적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대중들은 (신)보수적 정치세력에게 희망을 걸고 있다. 현재의 교착이 진보적인 방향으로 타개된다면 한국사회는 지난 20년 동안의 ‘자유민주주의적 개혁’의 단계에서 넓은 의미의 ‘사회(적) 민주주의 개혁’의 단계로 이행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조희연, 2007, “한국 민주주의의 병목 지점과 그 돌파구는 무엇인가: 강준만 교수의 비판에 대한 반론을 겸하여”, <월간 인물과 사상> 2007년 11월호). 신보수 정권 시기가 ‘우회’의 시기’가 될 지 일본과 같은 ‘55년체제’의 장기지속으로 나타날 지는 향후 시민사회의 대응과 대중의식의 변화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 7) 이명박 정부의 핵심 권력엘리트는 다양한 구성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을 포함하여 신보수의 엘리트는 6·3사태와 같이 60년대 박정희식의 근대화 흐름에 저항하는 반독재세력이었다가 70년대 이후 박정희식 개발주의 체제의 내부에 들어간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어떤 점에서 구 개발독재적 보수와 다르지만 한편에서는 그들의 규범과 문화, 관행에 이미 상당한 정도로 침윤되어 있다. 이명박 후보가 탈체와 위장전입 등 무수한 구 보수적 행태와 규범을 드러내고 있는 것도 우연은 아니다.

다8). 여기서 후자의 성격이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라고 하는 새로운 조건 속에서 ‘혁신된’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연속성이라는 견지에서 보면 개발독재적 보수·반(反)개혁적 보수를 계승하는 정치세력이 집권당으로 재복귀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변화된 외양을 띄고 있으나, 우리 사회의 거대한 보수와 진보의 각축에서 ‘진보정권’이라고 규정되는 참여정부의 실패와 문제점에 도움을 받으면서 보수가 재집권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신보수는 구보수의 가장 핵심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개발주의’와 ‘성장주의’를 ‘신개발주의’ 혹은 ‘신성장주의’라는 형태로 정확히 계승하고 있다. 또한 신보수는 탈규제와 시장자율을 강조하고 있지만 탈규제와 시장자율의 성격으로서의 ‘친기업주의’를 정확히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구 보수가 자본이 자기발로서지 못하고 국가적 지원에 힘입어 성장해야만 했던 ‘원시적 축적’기의 친기업주의를 구현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자본이 자기발로 서고 자력으로 중소자본과 시민사회를 통제하고 국가적 지원 없이도 글로벌 경영을 추구할 수 있는 단계의 친기업주의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보수의 친기업적 국가개입주의와 신보수의 친기업적 시장자율주의는 ‘시장과 국가의 관계의 형태’는 다르지만 정확히 친기업주의와 친자본적 성격을 공유하고 있다. 물론 신보수도 경쟁의 원리의 전사회적 확산과 함께 시장자율을 촉진한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개입주의적 친기업 정책을 요청하고 있는 것도 조건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신보수 정부는 부패, 신권위주의(잠재적으로), 불도적인 개발주의 등과 같은 구 보수의 부정적인 측면을 드러낼 개연성이 크다. 이미 BBK 사건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도덕적 정당성’에 도전을 받는 방식으로 집권한다고 하는 점에서 이러한 개연성을 일정 부분의 현실이 되고 있다. 과거 박정희 세력이 ‘군사쿠데타에 의한 집권’이라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의 부재’를 태생적 한계로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탈세, 위장전입, BBK사건 등에서 ‘반부패의 도덕성 부재’를 태생적 한계로 가지면서 출범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과거 구 개발독재적 보수가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기타의 가치들--특히 환경 등--을 주변화시키고 희생시키는 기조 위에서 있다고 한다면, 그런 근본적인 기조에는 크게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 2)진보개혁세력의 대선 패배의 원인

### 중도리버럴 정부에 대한 이반(離反)과 대안적 프레임의 부재

한국에서 신보수 정권 시대로의 전환은 대선이라고 하는 권력교체 국면에서의 각 축에서의 주체적 변수들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신보수 정권의 등장을 가능케 한 대선에서의 반독재 민주세력의 패배는 무엇보다도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광범한 실망과 이반에서 그 원인이 찾아진다. 민주화과정에서

8) 한국에서 보수정당의 두 지도자인 이명박과 박근혜는 이런 점에서 갖는 상징성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명박은 ‘신개발주의적 박정희’를 상징한다면, 박근혜나 이회창은 극우반공주의적 박정희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양자가 갖는 여러 복합적 성격 중 박정희와 관련한 지배적인 성격을 지칭하는 것이다.

나타나는 민주정부의 전략적 능력은 나라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참여정부의 전략적 통치능력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사례이다. 태국의 탁신정부는 ‘경제적 민주주의’ 정책을 통하여 자신의 지지기반을 일정하게 창출한 반면에, 한국의 참여정부는 새로운 지지층을 창출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기존의 지지층의 광범한 이탈을 초래했다. 반독재 민주정부의 주도세력은 중도자유주의(리버럴, liberal)세력이 주도하는 정부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이의 위기는 한국만의 예외적인 현상은 아니다. 사실 많은 민주화의 국가들에서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제약효과, 나아가 구 독점적 기득권세력의 강고한 힘과 저항,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루어지는 민주정부의 정책효과--양극화, 소득분배 악화, 고용구조 및 실업 등의 악화된 조건--및 그에 기인하는 대중들의 이반 등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유사한 위기가 나타난다. 실제 아시아의 많은 포스트-독재 정부, 반독재 민주정부 일반이 지속적인 정치적 불안정을 경험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지구화 정치의 일반적인 불안정이 한국의 반독재 중도리버럴 정부에도 관철되고 있다. 더구나 중도리버럴 정부가 신자유주의 지구화 시대의 대중생활의 위기라고 하는 일반적 현상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회경제적 정책으로 이를 보완하고 상쇄·완충하지 못함으로써 지지 기반은 더욱 균열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는 이에 더하여 노무현 대통령 등 중도자유주의 통치주체들의 ‘통치의 미덕’ 부재<sup>9)</sup>, 그들의 행동이 보수적 미디어에 의해서 더욱 높은 수준으로 ‘희화화’되는 과정들이 결합되면서, 더욱더 지지기반이 붕괴했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사회적 세력의 측면에서 보면--1기 중도리버럴정부(중도개혁자유주의정부)인 국민정부를 잇는--2기 중도리버럴 정부는 우파의 공세와 좌파의 공세 위에서 무력화되었다. 이때 우파의 공세는 중도리버럴적 개혁 마저도 ‘좌파’ 혹은 ‘사회주의’적인 정책으로 규정하는 공세였다면, 좌파의 공세는 중도리버럴적 개혁의 불철저성과 비(非)민주적 성격을 쟁점화하는 공세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파적 공격과 좌파적 공격이 중도리버럴 정부에 대한 대중의 이반으로 매개해낸 기구가 조선일보 등 보수적 미디어였다고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의 중후반에 바로 ‘이반하는 대중’이 출현했다. 이러한 대중의 이반의 촉진한데는 한국사회의 ‘동질성’이라는 성격과 대중의 잠재적인 ‘평등주의’적 지향이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노무현정부의 중후반에 ‘한국민주주의의 위기론’이 대단히 편만했었다. 이는 우파도 그렇게 규정했고 좌파도 그렇게 규정했기 때문이었다. 어떤 의미에서 담론적 동맹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한미FTA는 추동하게 되면, 우파는 친FTA적 스탠스를 취하기 때문에, 이러한 담론적 동맹으로부터 이탈하게 되고 잠시 ‘위기론’이 주변화되는 양상도 나타났던 것을 기억해보면 이러한 동맹의 성격과 변화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출발점’적 요인에 더하여, 대선에서 신보수 후보가 과반수에 근접한 48% 이상의 지지를 받게 된 데에는, 먼저 신보수 후보와 경쟁하는 중도자유주의 후보나

9) 조희연, 2005, “‘87년체제’와 민주개혁운동의 전환적 위기: 그 원인과 대안의 탐색”, <시민과 세계> 8호, 11월.

급진진보후보가 대안적 프레임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신보수 후보의 무수한 도덕적 흠결--탈세, 위장전입 등--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지지가 이동할 수 있는 '대안적인 목표점'을 제공하지 못했던 것이다. 신보수 후보의 경제살리기 담론, 경제회생담론, 경제재도약담론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사이, 중도자유주의 후보는 '혁신된 개혁적 경제담론'을 가시화하지 못했고 급진진보 후보는 '반(反)신자유주의적 급진경제담론'을 대중화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대안적 프레임은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정책적 콘텐츠로 구성된다. 단적으로 노무현 정부와 단절된 '포스트-노무현 프레임', 즉 민주정부의 통치 실패를 상쇄하는 혁신된 프레임을 형성하지 못했던 것이다. 노무현이 포스트-김대중 프레임을 형성했던 2002년과는 달랐다. 참여정부 하에서 자신들의 삶의 조건이 악화되었다고 느끼는 대중들이 강력한 변화욕구--필자의 표현으로는 '묻지마 변화욕구'--를 보이는 상황에서 중도자유주의 후보와 급진진보 후보가 이러한 변화욕구에 부응하는 후보로 대중들에게 인식되지 못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노무현 정부에 대한 대중들의 반대정서가 강렬함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 등이 자신의 정책들을 항변하는 과정에서 '친노-반노' 구도가 선거 종반까지 지속될 수 있었던 것도 신보수 후보의 압도적인 승리로 귀결되는 요인이 되었다. 비록 참여정부에 대한 대중들의 이반이 크다고 하더라도, 중도자유주의 후보가 이를 상쇄하면서 새로운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보수 후보와 중도자유주의 후보 간의 각축 보다는, 이전 정부, 즉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심판이야 아니냐의 구도가 끝까지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이러한 상황은 신자유주의 지구화 시대의 혁신 중도리버럴 정치와 급진진보정치가 어떤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이명박으로 상징되는 신보수후보는 '독재 대 반독재'의 구도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런데 신보수 후보의 주요한 승리는 바로 신자유주의지구화 시대 대중생활의 위기에 대응하는 (반독재)중도리버럴 정치의--거대한 구조적 제약조건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실패에 따른 '반사이익'에 크게 규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남미와 다른 '동아시아 정치공간'의 '친미적 구조'에 의해서도 규정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 대만 등 동(북)아시아는 상대적으로 '친미주의'가 성공적으로 착근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지역적' 특성이 일국 내에서 '신자유주의 지구화 시대의 정치'를 '우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신보수정권의 지향==친기업적인 신자유주의 경제담론/신자유주의적 경쟁국가

신보수 후보의 승리는 신자유주의 지구화 시대 '(신)보수정치'의 모습을 말해준다.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시대에 전지구적으로 헤게모니적 지위를 갖는 일련의 신자유주의적 지향과 기조들---작은 정부, 국유화를 해체하는 민영화, 국가 실패에 대응하는 시장자율의 확대, 비정규직화 혹은 연공서열적 노사관계의 해체 등으로 상징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탈규제, 지구적 경쟁의 격화에 따른 국제경쟁력 강화, 사



회정책 보다는 경제정책의 지배적 지위 등-을 전면화되는 시대의 개막을 의미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지향과 기조들이 정부의 지향과 기조들로 폭넓게 관철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신보수 정권이 구체화하게 될 지향은 ‘친기업적인 신자유주의적 경제회생담론’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보며, 국가성격이라는 점에서 보면 ‘신자유주의적 경쟁국가’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본다<sup>10)</sup>. 이는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시대에 조응하는 국가의 재구조화라고 할 수 있다. 초기산업화 단계의 친자본적 국가는 개발독재적 국가로 구체화되었다고 한다면, 반독재 민주화운동 등 민중적 투쟁을 통해서 초기산업화 단계의 국가가 위기에 처했고--80·90년대의 일정한 과도기적 각축기를 거쳐--신보수당 정권의 출범을 계기로 본격적인 ‘신자유주의적 경쟁국가’로 재구조화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는 개발독재에 저항하면서 변화한 대중들의 주체화 및 시민사회의 저항적 활성화로 인한 정치적 요구의 상승에도 불일치하지 않으며, 개발독재를 통해서 이루어진 한국자본주의의 물질 기초의 확충에 비추어볼 때도 모순되지 않은 국가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신보수 후보는 경제회생담론, 경제재도약 담론, 탈규제 담론 등을 부각시켰고 이것이 보수적 미디어의 지원에 힘입으면서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 중도자유주의세력이나 급진진보세력들이 ‘담론 투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패배로 새롭게 담론지형이 구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명박 후보는 참여정부 하에서의 일련의 경제적 문제점이나 양극화 등이 ‘좌파 정책’이나 규제적인 ‘사회주의적’ 정책 때문이며 새롭게 기업친화적인 정책, 성장지향적인 정책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해석프레임’을 제공하였고 이것이 국민들에게 파고들었다. 반대로 신보수 후보의 이러한 신자유주의 담론 구성 및 대중화에 대응하여 ‘혁신된 중도개혁담론’이 창출되지 못했고, 반신자유주의적 급진경제담론이 대중화되지 못했던 것이다.

중도리버럴 정부로부터 ‘이반하는 대중’을 창출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어떤 의미에서 진보개혁세력은 이러한 이반하는 대중을 더 높은 수준의 ‘진보적 대중’으로 전환하는데 실패하였고 ‘이반하는 대중’은 ‘신자유주의적 성장담론에 포획된 대중’으로, 그래서 신개발주의적 프로젝트에 동의하는 ‘새로운 성장연합’에 무조건적 지지를 보내는 대중으로 전환될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중도리버럴세력들은 노무현 정부와 차별화하면서 ‘혁신된 중도리버럴 경제담론’으로 대중과 결합해야 했으나 이는

10) 주지하다시피 이미 우파에서는 ‘경쟁’ 자체가 중요한 담론적 구성요소가 되었다(마이클 포터, 김경목 외 옮김, 2001, {경쟁론}, 세종연구원 참조) 좌파에서도 포드주의적 체제에 기초한 사회민주주의체제의 위기 속에서 경쟁국가(national competition)가 출현을 이야기한 J. Hirsch의 논의(J. Hirsch, 1995, "Der nationale Wettbewerbsstaat-Staat, Demokratie und Politik im globalen Kapitalismus, Berlin; 안승국, 1999, "세계 자본주의체제에 있어서 포드주의의 위기와 포스트포드주의", {국제정치논총} 39(3); 요아힘 히르쉬, "포드주의적 보장국가와 신사회운동", 한국정치연구회 정치이론분과 편, 1993, {국가와 시민사회: 조절이론의 국가론과 사회주의 시민사회론}, 녹두 참조)가 참고가 될 것이다. 볼 제솅도 ‘숨페터적인 경쟁국가’를 이야기한 바 있다. 공급 사이드, 즉 기업사이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혁신노력이 국가의 핵심적 기능으로 부상한 국가를 제솅도 이야기한 바 있다(B. Jessop, 2002, The Future of the State, Cambridge: Polity Press. Ch. 3. The Schumpeterian Competition State).

실패했으며, 급진진보세력 혹은 좌파세력은 보다 급진적인 반신자유주의적 담론과 급진개혁담론으로 대중과 결합하는데 실패하였다.

### 3)신보수정권의 성격과 향후의 위기적 요소

앞서 지적한대로 신자유주의 지구화 시대 대중생활의 위기에 따른 중도리버럴 정치의 실패에 대응하여 헤게모니적 지위를 갖게 된 ‘(신)보수정치’는 그 자체가 여러 가지 위기적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신보수당 정권이 추진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는 여러 가지 긴장과 도전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신보수 후보의 승리 자체가 곧 민주화 과정에서의 대중들의 ‘보수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큰 도전을 이미 내포하고 있다. 이는 아시아 민주화의 과정에서 대중들의 진보적 요구들--예컨대 정치적 민주주의의 확장, 투명성의 증대, 대중들의 사회경제적 삶의 증대 등--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sup>11)</sup>. 앞서 지적한 대로, 참여정부에 대한 실망에서 기인하는 ‘문지마 변화’요구에 보수가 부응함으로써, 중도적 지향을 갖는 대중들이 신보수 후보를 지지하는 식의 정치적 선택을 했으나, 그것은 대중들의 변화 요구 자체가 소멸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통상 한국의 보수:중도:진보의 비율은 3:4:3의 구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지난 20년 동안 4의 중도적 지향을 갖는 대중들의 다수는 진보개혁세력이 내건 민주개혁에 대해서 동조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참여정부 하에서 이러한 중도적 대중의 지향이 신보수후보를 지지하는 식으로 대대적인 이동을 했음을 의미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중도적 대중은 자신들의 삶의 조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는 참여정부의 무능을 질책하는 식으로 이동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오히려 대중들의 선택 속에는 양극화, 비정규직화 등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강력한 사회경제적 요구가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진보적’ 요소를 내장하고 있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단지 신보수후보가 이러한 대중들의 변화요구를 신자유주의적 경제회생담론으로 구성·전유·획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신보수 정부의 정책이 시행되면서 이를 둘러싼 새로운 해석투쟁 혹은 담론구성투쟁이 전개될 것이다.

신보수 정권이 구현할 ‘친기업적인 신자유주의적 경쟁국가’는 대중들의 수준에서는, 이른바 ‘샌드위치론’--후진국의 추격과 선진국의 견제로 인하여 ‘경제적 협공’ 상황에 놓인다는 논의--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세계경제의 거대한 유동적 상황 속에서 한국경제의 적절한 자리를 발견하려는 노력, 또한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발견하려는 노력으로 기대를 모을 수 있다. 실제 신보수 세력은 이른바 ‘문제는 경제야’

11) 2007년 1월 1일 신문매체들이 실시한 신년특집 여론조사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안정과 주거 안정, 양극화 해소, 사회복지 확대, 사교육비 경감 등 일련의 진보적 과제들을 신보수정권에 요구하는 식으로 나타나 있다. 물론 이것이 경제안정 및 성장 기조의 회복과 같은 식의 요구와 결합되어 있으면서 말이다. 이러한 요구들은 사실 ‘진보적 요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중도리버럴 정치의 실패 속에서 대중들의 ‘진보적’ 요구 자체가 신보수에게 수렴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대중들의 잠재적인 ‘진보적’ 요구가 언제든지 새로운 형태로 표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면서 대중들의 요구를 고성장의 치환(置換)하는데 성공하였다. ‘경제대통령’을 부각시키고 그를 통해서 높은 성장률을 달성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국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삶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게 만드는데 성공했다. 그것은 경부운하와 같은 거대한 토목사업을 벌리는데서 경제회생의 희망을 만들려 하는 시도로 나타났다. 나아가 성장 중심의 경제마인드를 부동산 문제나 교육문제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해법으로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였다.

그러면 몇 가지 지점에서 신보수정권의 위기적 요소들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시장자유주의와 신개발주의적 국가개입의 괴리이다. 신자유주의적 경쟁국가는 기본적으로 시장자유, 탈규제 등을 강조하고 핵심기조로 한다. 그러나 시장자유성과 국가 불개입을 높이 외치면서 동시에--미국의 뉴딜 시대의 ‘케인즈주의적 국가’에서나 시행함직한--거대한 국가적 토목사업을 통해서 경제를 부양하는 ‘개입’국가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 대한 공적 규제를 탈규제라는 이름으로 자율화하면서 동시에 기업의 투자와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 보다 전면적인 친기업적 국가개입을 가시화하려고 하고 있다. 시장에 대한 공적·사회적 규제를 철폐하고자 하는 탈규제 및 시장자유 지향과 ‘친기업적인’ 국가개입을 추구하고자 하는 또 다른 지향 사이의 괴리가 시간이 흐르면서 가시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고성장을 통한 고용 및 실업, 양극화 극복 기조가 갖는 모순성이다. 세계경제의 유동성 자체는 높은 성장률 자체를 달성하는데도 많은 난관을 조성한다. 그러나 그것을 돌파하여--3-5%의 성장률을 보인 노무현 정부와 달리--7% 내외씩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신보수세력이 친기업적 성장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대중화하는데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반대로 ‘지구화 시대 아무리 고성장을 이룩해도 그것이 고용 성장, 실업축소,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엄연한 현실도 존재한다. 이것은 신보수주의적 한국경제의 진정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신자유주의시대 모든 아시아 경제의 딜레마이기도 하다. 예컨대 삼성전자가 수조원의 수익을 내더라도 그것은 서민들의 삶과 크게 관계가 없을 수 있다. 60·70년대 한국경제의 초기산업화 국면에서는 절대적인 성장의 증가가 곧 고용의 창출, 실업 축소 등을 낳았던데 반해, 지구화 시대 그리고 초기산업화 ‘이후’ 경제에서는 단순히 60·70년대의 고도성장정책을 복원함으로써 해결될 수 없는 ‘단절의 구조’에 직면하고 있다. ‘양극분열형’ 구조 혹은 ‘양극화 축적체제’를 내포하고 있다<sup>12)</sup>. 바로 이처럼 신보수 정권의 지향대로 고성장을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또한 그것을 위하여 경쟁의 논리를 전사회적으로 확장하고 나아가 친기업적 정책에 의해 투자환경을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대중들의 요구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신보수정권이 ‘성장일변도’라는 것이 우려의 시선으로 신보수정권을 보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셋째, 구 보수의 부패문제이다. 신보수정권은 서민생활의 안정화를 위해서 통신세의 인하나 대기업들에 대해서 투자증가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분명 ‘정치적’ 요구

12) 이병천, 2007, “양극화의 함정과 민주화의 깨어진 약속”, 이병천 편, {세계화시대 한국자본주의}, 한울 참조.

이다. 대기업들은 이러한 정부의 ‘정치적’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에 자신들의--이른바--‘손해’를 만회할 수 있는 ‘규제 완화’나 ‘특전’을 받는 ‘경제적’ 요구를 요구할 것이다. 신보수정부에서 구 보수정권과 같이 ‘규제 완화/특혜와 부당한 자금의 교환 관계(trade-off)’가 재생할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물론 이는 신보수 정치세력 자신들이 얼마나 자신들을 성찰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또한 앞서 서술하였듯이, 탈세, 위장전입, BBK사건 등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부패의 이미지는 이명박 정부가 ‘태생적인’ 이미지가 되고 있다. 단지 이전시기와 달리 대중들이 그것을 문제시하지 않는(don't care) 것이다. ‘좀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으면 어때? 경제만 살리면 되지’하는 식의 태도는 사실 ‘경제를 못 살리게 되면’ 이중적인 공격에 직면할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더구나 이명박 후보의 탈세, 위장전입 등 각종 탈법적 행위에 대한 용인은 그동안 공인(公人)에 대해서 가해지고 있었던 대단히 엄격한 도덕적 기준--우리 사회는 사실 대단히 이중적이다. 그러나 공인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을 무너뜨리게 되었다. 사실 ‘장상은 억울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이다. 이는 향후 공직자에 대한 청문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긴장을 동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넷째, 높아진 기대수준과의 괴리가능성이다. 사실 참여정부에 대한 대중들의 실망과 이반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였다. 단순화시키면 참여정부와 중도리버럴 정치의 실패 요인의 50%는 신보수정권과 (신)보수정치도 직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들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신자유주의적 지구화가 가져오는 불안정 요인, 중국 추격효과(중국의 추격으로 인하여 고용 흡수능력이 큰 한국의 중소기업이 근저로부터 해체되는 것), 한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기득권 집단의 저항, 이른바 생력화(省力化)과정의 진전으로 인한 산업성장의 고용창출 효과 약화 등 여러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 등 보수적 미디어의 영향으로 이 모든 문제를 ‘노무현과 노무현 세력’의 주체적인 요인으로 돌리면서 이명박 정부 하에서 양극화와 실업문제, 불평등 문제 등이 모두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게 만들었다<sup>13)</sup>.

사실 이번 대선에서 허경영 후보가 아무런 재원조달 계획 없이 ‘노인수당 월 70만원, 신혼부부 각각 5,000만원 보장’ 등의 공약을 내걸고 그것이 인구에 회자했던 것은 그만큼 보수언론의 참여정부 공격이 대다수 국민들의 기대수준을 한껏 높여놓았음을 의미한다. 이것을 어떻게 응전할 것인가하는 것은 신보수정권과 (신)보수정치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신보수주의자들은 노무현 정부 정도의 ‘시장규제’ 정책도 ‘좌파정책’이라고 하면서 국가개입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시장지원적 국가개입’, ‘친기업적 국가개입’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문제는 국가불(不)개입이 아니라 국

13) 필자는 이를 “조중동의 ‘의도하지 않은 효과’”라고 표현한다. 조희연, 2007, “‘지적’의 올바름과 ‘진단’의 오류”, {레디앙} 1월 25일 참조.

가개입의 ‘성격’인 것이다. 친기업적인 혹은 더 좁혀서 이야기하면 ‘친(親)재벌’적인 신보수정권이 자신이 추동하는 성장정책을 통해서 대중들의 요구가 해결되지 않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긴장과 위기가 상존할 수 있다.

사실 60·70년대는 근대화와 산업화가 동반하는 ‘스펙터클’--경부고속도로, TV의 도입, 삼일빌딩 등 고층건물의 등장 등--이 대중들로 하여금 환호와 박수를 보내게 만들었다. 신보수정권 하에서도 일종의 ‘두바이’식 재개발과 고층건물의 등장, 다양한 토건국가식 개발사업이 갖는 새로운 ‘신스펙터클’이 초기에 대중들로 하여금 환호와 박수를 보내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스펙터클은 스펙터클이고 자신들의 삶이 그것과 괴리되어 있다고 느끼는 순간, 그 환호의 대중은 ‘저항적 대중’으로 변화하였다. 바로 이러한 지점들을 신보수정권이 성찰하고 구보수와 구별되는 보완적 정책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위기의 요소는 상존할 것이다.

### 신보수정권이 얼마나 구보수의 개발독재의 명암을 성찰할 수 있느냐에 따라

물론 신보수정권 앞에 놓여 있는 위기적 요소는 일차적으로는 구 개발독재적 보수의 명암을 얼마나 성찰할 수 있느냐 다음으로는 신보수정권이 신자유주의 지구화의 정치의 구조적 불안정성을 얼마나 성찰하면서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신보수의 주요한 화두는 ‘선진화(先進化)’이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로’라는 슬로건은 신보수를 산업화 시대의 구보수와 차별화하면서 자신들의 참신성과 단절성을 드러낼 수 있다. 그러나 60·70년대의 친기업적인 구개발주의적 큰 성찰 없이 그대로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맥락에 대입된다면, 이는 새로운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 취임 후 수일 만에 만난 재벌총수들에게 ‘투자고충을 위해서 전화를 수시로 해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과거 구 개발주의 시대를 뛰어넘는 ‘친기업적인’ 그것도 ‘친재벌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대기업들의 투자촉진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식의 자세로는 구개발주의의 실패를 넘어설 수 없다. 잘못하면 60·70년대의 불도저식 개발주의의 부활로 나타날 수 있다. 신보수정권이 ‘인간다운 경제를 만들어가는 선진화’가 아니라 박정희식 선진화, ‘불도저식 선진화’, ‘성장일변도의 선진화’로 갈 수 있다. 이 점을 얼마나 넘어설 수 있는가가 신보수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돌이켜 보면, 박정희 체제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에서는 불도저식 개발주의를 통해서 근대화와 산업화를 ‘압축고속성장’ 모델로 실현하였지마는, 다른 한편에서는 근대화와 산업화가 새롭게 동반하는 모순들---도시화에 따른 주거문제, 성장에 따른 인플레이션 등--과 독재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위기의 체제’<sup>14)</sup>로 작동했다. 전자의 측면만을 바라보고 후자에 대한 성찰적 고민이 없으면, 신보수정권 역시 곧 ‘위기의 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 더구나 신자유주의 시대의 경제운용의 어려움, 중국 등의 추격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전반적인 하층

14) 조희연, 2007, {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 역사비평사, 7장 참조.

붕괴 등의 상황으로 볼 때, 더욱 위기의 가능성은 클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박정희에게는 금기의 언어들이었고 반독재세력의 요구사항이었던 민중생존권, 국가의 공공성, 민주주의, 분배 등을 어떻게 경제정책 속에 융해할 것인가, 혹은 사회정책에 의해 보완할 것인가하는 고민이 역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최소한의 공공성, 최소한의 사회정책을 배합하지 못한 구개발주의 국가의 위기의 전철을 신보수국가가 밟지 않을 수 있다.

구 개발독재적 보수의 신개발주의를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시대에 신보수정권과 (신)보수정치의 기조로 무매개적으로 실현한다면, 그것은 과거 개발독재 시대 보다 더 큰 정치적 불안정을 동반할 수 있다. 중도리버럴 정부와 정치를 불안정화시켰던 신자유주의 지구화시대의 불안정 요인은 상존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양극화의 경향성이 구조적으로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신보수 경제’의 실현은 60·70년대나 중도리버럴 정부 때 보다 더 더 심각한 ‘단절의 경제’를 야기하고 이는 대중생활의 더 큰 위기와 그로 인한 정치적 위기를 수반할 수 있다. 이는 전적으로 신보수정권과 (신)보수정치가 구 개발독재적 보수의 명암을 얼마나 성찰하느냐 또한 신자유주의 지구화 시대의 정치의 불안정성을 얼마나 성찰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 4. 신자유주의 지구화 시대의 신보수정권에 대응하는 진보개혁의 전환의 과제--신보수 시대는 진보 펀더멘털의 급진적 확충을 요구한다

앞서 신보수정권의 출현은 ‘보수의 진화’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제 진화된 보수에 대응하는 진보의 ‘진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제 한국의 진보개혁세력은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진보개혁운동이 성취해온 것과 그것의 한계지점, 문제점을 넘어서는 새로운 진보개혁의 힘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신보수정권의 출범은 시민사회 및 민중진영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현대사의 사이클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고 새로운 경쟁과 쟁투(爭鬪)의 대상이 출현했음을 의미한다. 더구나 65%에 이르는 보수지지를 염두에 둔다면 그 경쟁과 쟁투의 대상이 대중에 대한 강력한 호소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1930년대 파시즘의 대두가 중간층과 자영업자층, 심지어 노동자계급 등의 압도적인 지지에 의해서 가능했었음을 상기할 때, 진보개혁진영으로서는 대단한 위기의식과 깊은 성찰을 요한다.

앞서 필자는 다양한 성찰의 지점들을 지적하였다. 주체의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대안적 실천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필자의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지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와 혁신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반독재적 진보, 민주개혁적 진보를 넘는 새로운 진보

돌이켜 보면, 60년대 이후 근대화 추동하는 ‘개발독재적 보수’가 일정한 ‘선도성’을 가졌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반독재적 진보’가 시대를 점차 주도하기 시작하였다. 그 정점에 87년 6월 민주항쟁이 존재한다. 이 항쟁에 직면하여 군부독재세력

(개발독재적 보수)는 민주화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를 받아들이게 된다. 여기서 한국 사회는 개발독재와 반독재저항 모두가 ‘민주개혁(독재로부터 민주주의로의 이행)’의 시대로 이행하게 된다. 여기서 ‘반독재적 진보’는 ‘민주개혁적 진보’로 자신을 변화시키면서 위로부터의 ‘제한적 민주개혁’을 추진하는 보수(예컨대 노태우정부)를 아래로부터 선도할 수 있었다. 이런 속에서 97년 경제위기와 결합되면서 ‘반독재 민주정부’가 들어서게 된다. 여기서 ‘민주개혁적 진보’의 일부--중도리버럴적 정치세력--가 집권세력이 됨으로써 한편에서는 기존의 야당적 민주개혁 의제들이 정책의 제로 되어 일정하게 실현되게 되고 다른 한편에서 국가권력의 책임주체로서 도전을 받는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는 97년 반독재 민주세력의 집권으로 진보는 자신들의 주장하던 의제들을 국가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게 되었지만 반대로 국정운영의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로 전화되게 된다. 역설적으로 반독재민주정부의 집권을 도왔던 97년 경제위기는 다른 한편에서 김대중 정부로 하여금 전면적인 개방화와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했고 여기에 제한적인 사회정책을 도입하면서 개방화와 시장중심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하게 된다. 국민정부 하에서는 사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같은 선도적인 노력이 존재한다. 그러나 국민정부를 잇는 참여정부 하에서 중산층의 붕괴나 양극화 등의 이슈에 대해서 효과적인 사회정책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반독재 민주정부가 개방화와 시장중심적인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동하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양극화, 실업, 비정규직화 등 대중생활을 불안정하게 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과감한 사회정책으로 대응하거나 경제구조 자체를 상생(相生)적 구조로 전환시켜내지 못함으로써, 대중들이 참여정부로부터 폭넓게 이반하게 되었다. 그 결과 신보수정부가 수립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제 신보수 정권 하에서 진보는 다시 저항적 진보의 지위에 놓이게 되었다. 이제 신보수적 지배에 대응하는 저항적 진보로서, 반독재적 진보나 민주개혁적 진보를 뛰어넘어, 신보수정권의 새로운 성장드라이브에 대응하는 새로운 진보로서 스스로를 대안세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 **두 트랙전략-진보적 정치실천과 진보적 사회운동적 실천의 병행**

신보수에 대응하는 진보의 재구성은 두 가지 차원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즉 87년 이후 20년 동안의 민주화과정 속에서 제도정치 영역이 확장되었기 때문에--제도정치 내에 진보개혁적 세력들이 일정한 기반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이러한 확장된 제도정치영역에서의 대안적 실천과 이러한 제도정치 외부에서의 대안적인 사회적 실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신보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도정치의 진보적 확장전략과 대중운동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급진화전략을 두 가지 구성요소로 하는 이중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대중이 민주주의를 획득하고 제도정치적 공간이 확보되면서, 이제 사회운동 역시도 ‘두 트랙(two track)’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의회를 포함하여 제도정치적 공간에서의 ‘진보적 정치실천’과 제도정치적 공간 외부에서의 ‘진보적 사회운동적 실천’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sup>15)</sup>. 한편에서는 제도정치적 공간에서의 진보의 확장전략이 필요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대중적인 사회적 힘의 강화전략이다.

2007년 초 전개된 진보논쟁에서 최장집 교수가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전자였다고 생각된다. 그런 견지에서 제도정치적 공간에서 다수파로 부상한 중도리버럴 세력들의 무능과 실패를 지적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단지 필자는 최장집 교수의 제도정치적 공간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제도정치적 실천의 계급적·사회적 기반 자체의 확장을 강조하기 위하여, 대립지점을 ‘제도정치 중심주의 대 사회 중심주의’라고 표현한 바 있다. 그러나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사회중심주의적 관점에 서면서도 제도정치적 실천전략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제도정치적 전략을 배제한 사회 중심주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중전략론을 이야기할 수 있다.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대중에 의해 획득한 제도정치적 공간에서의 진보적 개입전략과 대중운동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 운동을 병행전략이다. 물론 ‘정치는 사회적 관계의 반영이다’라는 전제 위에서, 물론 나는 사회중심주의적 관점에서 제도정치 진보화-사회급진화의 병행전략 혹은 제도정치적 실천과 사회투쟁적 실천의 병행전략이라고 표현하고 싶다<sup>16)</sup>.

## 1) 급진민주주의적인 대항담론과 비전--제도정치적 차원

**먼저 제도정치적 공간에서의 대안적인 진보적 정치실천이 필요하다.**

이는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시대 ‘정치의 실종’을 넘어서서, 정치를 회복시키는 방향에서의 급진민주주의적 대항담론과 비전을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과제들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이명박 세력이 ‘신보수적 희망’으로 대중들의 지지를 획득했다고 하면, 신보수적 희망을 ‘대체’할 수 있는 ‘급진적인 새로운 희망과 그것을 표현하는 담론’을 만들어내야 한다.

향후 신보수적 경제담론에 대응하는 대항담론은 다양한 형태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의 입장에서 신자유주의적 경제담론에 대응하는 대항 경제담론은 ‘사회

15) 이러한 이중전략은 폴란츠의 후기국가론에서 잘 나타나 있다(Poulantzas, Nicos, 1978, State, Power and Socialism, London: Verso; 박병영 옮김, 1994, {국가, 권력, 사회주의}, 백의). 사회주의로의 민주적 이행 혹은 사회주의로의 평화적 이행의 경로의 성격은 유로코뮤니즘과 사회민주주의의 해묵은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는 ‘민주주의의 최대주의적 확장’과 사회주의가 일치하는 것인가라던가, 국가권력의 계급적 주체가 과연 의회주의적 경로를 통해서 가능한 것인가하는 쟁점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운 것은, 역설적으로 대중정치 혹은 대중민주주의가 대중적으로 획득되는 순간 진보정치는 그러한 공간에 제약되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저항전략이 지배전략을 규정하지만 반대로 지배전략이 저항전략을 규정한다. 상호작용적 관계가 있다). 어떤 의미에서 87년 6월 민주항쟁이 바로 이러한 분기점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물론 이러한 조건은 영구지속적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지배가 폭력 그자체로 왜소화되는 ‘역류’적 상황, 혹은 대중민주주의의 공간이 무력화되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16) 진보논쟁과정에서 이병천 교수는 최장집과 조희연을 종합하는 의미에서 ‘이중민주주의’론을 제기한 바 있다(이병천, 2007, “신보수 시대 앞둔 진보 대 진보”, {레디앙} 2월 9일).



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담론으로, 친기업적인 신자유주의적 경쟁국가 담론에 대응하는 대항담론은 '지구화 시대의 새로운 사회국가' 혹은 '사회적 공공국가' '사회적 지속가능국가'<sup>17)</sup> 반신자유주의적 사회적 공공국가와 같은 개념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87년 이후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인식을 뛰어넘어, 민주주의를 급진적으로 확장한 '급진민주주의'적 대항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내재하고 있는 평등주의적 잠재력--'1인 1표주의'와 같은--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대한 규제장치로 확장한 새로운 민주주의적 비전이 필요하다.

신보수당 정권은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공공적 정치를 반대하면서 친시장적·친자본적 정치를--국가개입의 축소의 이름으로--부각시키고 친기업적 경쟁국가를 구체화할 것이다. 반대로 신자유주의적 친기업적 경제담론으로 무장한 신보수세력의 집권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대항세력은 성장 일변도의 경제에 대응하는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친기업적인 신자유주의적 경쟁국가에 대응하는 사회국가의 모델을 대중적 요구로 만들기 위한 저항적 실천이 가시화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신보수 정권 하에서 오히려 보다 전면적으로, 지구화 시대의 새로운 친기업적 경쟁국가 대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와 그것을 추구하는 새로운 사회국가(혹은 사회적 공공국가)의 대립이 가시화될 수 있다.

선진화가 사실 '가진 자들을 위한 선진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것은 사실 다양한 언어들로 이미 표현되고 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민주주의', '차별없는 성장', '사람 중심의 경제' 등으로 표현된 바의 보다 급진적인 희망이어야 한다. 선진화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가진 자들을 위한 선진화'에 대응하여 '민중들과 못가진자들을 위한 선진화'의 비전, '가진자들을 위한 선진화'가 아니라 '공생(共生)적 선진화', '박정희식 선진화'가 아니라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선진화'여야 한다. 이것들이 대중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담론화하여야 한다. 신보수의 프로젝트가 가져올 문제점들에 대한 대중들의 체험이 급진적 희망을 전환될 수 있어야 한다<sup>18)</sup>.

사실 한국사회에서 경제는 '고성장'의 문제로 인식되고 보수세력에 의해서 그렇게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엄밀하게 이야기한다면, 성장이 문제가 아니라 성장의 경제에 조응하는 새로운 '지속가능한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것, 혹은 경제 내부에 최

17) 그런 논의의 한 사례를 진보정치연구소, 2007, {사회 국가, 한국 사회 재설계도}, 후마니타스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 '노동주도형 국민경제모델'을 제시한 {새로운 사회를 여는 상상력 - 신자유주의와 한미 FTA 그리고 분단체제 뛰어넘기}(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손석춘·김병권 외, 2006,시대의창)도 시장중심의 친기업적 모델과 대비되는 논의를 선보이고 있다.

18) 영국에서의 대처 정권은 17년 동안의 보수정권 시대를 열었으며, 1997년 출현한 블레어정권에게도 뉴레이버(New-Labour)라고 하는--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제약을 수용한--'온건화된' 신사회민주주의를 출현케 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신보수의 출현은 진보개혁진영 내부에도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를 수용한 온건화된 '신진보'를 요구하는가라는 물음을 던져볼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영국의 경우 복지국가의 수렴이 이루어졌고 그 복지국가의 유지로 인한 '과부하국가'의 압력을 노동당도 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데 반하여, 한국의 경우에는 대중들의 높은 평등주의적 요구가 현존하고 또한 그러한 요구를 순치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제도 등이 ---한국의 자본의 천민적 비타협성으로 인하여--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보수정권에 대응하는 더욱 높은 수준의 평등주의적 요구와 정책들을 포함하는 신좌파적·신진보적 프로젝트가 대중화될 가능성은 농후하다고 보여진다.

소한의 ‘공생의 지속가능성’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이다. 즉 세계 12대 경제대국이 일부 대기업 중심의 가혹한 구조로 작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오히려 중요하다. 유동적인 세계경제 내에서 한국경제의 ‘리스본 모델’식 전환이 필요하고 있고 세계경제 내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공간을 확보하고 신성장동력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한다. 사실 이런 점에서 한국경제가 다른 경제대국들에 비해서 지체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한국경제가 ‘배제적’ 구조로 또한 경제공동체의 구성원들을 가혹하게 수탈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필자는 ‘지속가능한 사회시스템을 갖지 못한 경제’로 표현한다. 이러한 사회 시스템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구조, 신빈곤층에 대한 사회복지시스템, 지역·계급계층 간 균형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는 참여정부의 실책이 새로운 급진적 프로젝트 자체의 공신력에도 마이너스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참여정부가 과감한 사회정책을 통하여, 민주정부의 대중적 기반 자체를 확장했다고 하면 다른 경로를 걸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sup>19)</sup>. 이 논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미국과 태국의 예를 통해서 이야기해보자. 먼저 1929년 경제대공황 이후의 위기상황 속에서, 미국의 민주당 정부가 과감한 사회정책을 통해서 ‘보수의 아성’이었던 미국 남부(Solid South)의 하층대중을 획득하는데 성공하였다. ‘따뜻한 사회정책’을 통해서 보수의 남부 기반이 ‘다원적인 정치공간’으로 전환하도록 만들었다. 미국의 하층대중에게 ‘따뜻한 사회정책’을 갖는 세력으로 민주당을 정립시킴으로써 정권교체가 이전보다 용이한 양상을 만들어내게 되었다. 특히 존슨행정부의 ‘따뜻한 사회정책’을 통하여 도시 하층민과 노인을 위한 사회정책을 개발하여, 이른바 경고한 남부아성(Solid South)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는 탁신정부이다. 여러 복잡한 요인들이 작용하기는 하지만, 탁신 정부는 몇 가지 ‘경제적 민주주의’ 정책을 통하여 북부, 동북부의 대중들, 농촌의 대중들을 자기 기반으로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였다. 마을 개발자금의 지원,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의 도입 등으로 인하여, 탁신의 사회적 기반은 특정영역에서 유지되었고 견고화되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참여정부는 자신들의 집권 5년 후에 자신들의 본래의 지지기반을 상실하고 일종의 ‘거덜나는’ 상황을 결과하게 된 것이다. 역설적인 상황이다. 사실 한국의 하층계급이 민주정부 5년을 통하여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였다. 그러한 것을 실행하지 못한 것이 보수의 저항이라고 하는 점이라도 대중에게 전달했었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전계급계층적으로 지지를 상실하는 역설적 상황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sup>20)</sup>.

19) 이를 필자는 경제적 민주주의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한다. 조희연, 2007, “‘지적’의 올바름과 ‘진단’의 오류”, {레디앙} 1월 25일 참조.

20) 이런 점에서 남북관계의 탈냉전화와 해빙을 주도하여 ‘남북 평화공존주의’의 긍정적 유산을 남긴 국민정부와 대비된다. 물론 참여정부가 이러한 긍정적 유산을 계승하고 북핵위기 등의 상황에서도 과거 남북대결주의로 가지 않고 남북간의 평화공존주의가 뿌리내리도록 하는데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보수의 중요한 기반이었던 남북대결효과도 약화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남북의 평화공존이 가시화되고 그 결과 대결의 위협이 없어지면서 대중들은 이를 ‘주어진’ 것으로 인식하게 되고, 오히려 새롭게 제기된 양극화, 실업,

이런 속에서, 진보개혁세력 일반의 정책수행능력 자체에 대한 불신이 나타나게 됨으로써 새로운 급진민주주의적 희망의 프로젝트 역시도 시련을 겪게 될 것은 분명하다.

### **과감한 정치적 리더십의 교체와 대항헤게모니 정치를 향한 각축**

둘째, 변화와 혁신의 노력은 과감한 리더십의 교체로 나타나야 한다. 대안적 프레임과 담론은 새로운 인물로서 표현될 수밖에 없다. 이번 대선에서 민노당의 예는 이를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 권영길 후보는 1997년 총파업을 통해서 한국노동정치와 진보적 민주개혁의 상징적인 인물이었고, 노동정치세력화의 견인차였다. 그리고 존경받는 분이다. 그러나 2007년 대선에서 급격한 변화욕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의 대선출마는 ‘3수의 고령 후보자’의 이미지로 투영되었다. 진보정당이 가장 진보적이어야 하는데, 사실 그러하지 못했다. 이는 권영길 후보의 인격이나 일생동안의 헌신이 퇴색했다는 것이 아니다. 변화와 혁신에 민노당의 후보가 부응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변화와 혁신을 인물교체로서 드러내야 한다.

여기에 신보수적 통치세력에 대응하여 대중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신진보의 프로젝트의 담지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를 둘러싸고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신보수 세력에 대응하여 저항적 진보의 헤게모니를 둘러싸고 경쟁이 있다는 말이다.

### **중도리버럴 정치의 급진적 혁신과 (급진)진보정치의 대중적 혁신 간의 경쟁**

여기에는 혁신된 중도리버럴세력과 혁신된 노동정치세력이 경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지구화 시대 진보개혁정치의 불안정성, 중도리버럴 정부와 정치의 실패를 고려하면서, 신보수정권 시대의 대항헤게모니를 둘러싸고 중도리버럴 세력과 (급진)진보세력이 경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도리버럴 세력은 이미 참여정부를 통해서 그 신뢰성, 무능력 등이 극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 혁신의 과정은 대단히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신당 등 중도리버럴 세력에는 두 가지 변화의 지향이 공존하고 있다. 한마디로 ‘신보수화’의 흐름과 ‘신진보화’의 흐름이다. 필자는 참여정부의 실패를 성찰하면서 중도리버럴 정치세력은 ‘급진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정치적 개혁주의를 뛰어넘어 얼마나 신자유주의 지구화 시대의 ‘사회경제적 진보주의’를 획득하느냐가하는 문제이다. 이 점에서 중도리버럴 세력들은 대선과정에서 동요하거나 시대적 과제와는 정반대의 경로를 밟아왔다. 예컨대 2007년 대선을 위한 통합신당 내 경선과정에서 손학규가 지지를 획득할 수 없었던 이유, 대선 이후 통합신당에서 손학규와 같은 리더십이 신보수정권에 대응하는 ‘리더십의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어떤 의미에서 더욱 급진적인 비전을 대중들은 요구하고 있다. 통합신당과 같은 중도리버럴 정당 내부에서 후자는 거의 없거나 실종 상태이다. 사실 ‘문국현 공간’이 바로 이를 상징한다. 어떤 의미에서 신보수 시대에 ‘문국현 공

---

고용불안정 등이 새로운 쟁점이 된 것이고 여기에 참여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다.

간'을 둘러싼 각축이 전개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이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이 공간을 획득해 들어갈 수도 있고 반대로 중도리버럴 정치세력이 자기혁신을 통해서 이를 재전유할 가능성도 있다(물론 앞서 지적한 대로 신보수정치가 구 개발독재적 보수의 문제점과 신자유주의 지구화 시대의 '단절의 경제'가 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성찰하면서 여러 가지 보완적인 정책 구상을 해서, 중도리버럴과 급진진보의 공간을 제약할 수도 있다). 현재로서 후자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전자에 폭넓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민주노동당과 같은 진보정치세력이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이 공간을 점유하게 된다면, 아마도 신자유주의 지구화 시대 '반신자유주의 정치의 대중화'가 가능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한국에서 급진진보정치의 시대가 열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담론적 투쟁도 대단히 중요하다. 어떤 의미에서 이명박 정부는 조선일보 등의 '우파 계급지'들의 조력을 받으면서 참여정부로부터 이반하는 대중을 '친기업적인 신성장담론' 속에서 포획할 수 있었다. 이제 급진적인 반신자유주의 담론이 필요하다.

우파 이데올로그인 복거일은 "정동영, 좌파 정채성 드러냈다면 30% 넘겼을 것"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어떤 점에서 이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어떤 의미에서 신보수시대에는 '신좌파적 담론'이 대항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냉철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sup>21)</sup>. 이것은 결코 '온건화'의 담론이 아니면, 대중들의 고통에서 우러나는 염원을 급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신보수담론이 그러한 염원을 보수적인 신성장담론으로 포획했던 것을 고려해야 한다. 신보수적 담론, 그 일부로서의 선진화 담론에 대응하는 혁신된 급진개혁담론이 필요하다. 2007년 대선에서 표현된 대중들의 '묻지마 변화'요구 속에는 자신들의 어려운 삶을 해결해 줄 것을 바라는 열망이 존재한다. 이러한 열망을 어떻게 급진적 열망으로 만들 것인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신보수정권 시대의 출현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진보의 진보'를 요구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60년대 박정희세력이--쿠데타 세력이라는 정치적 정당성의 부재에도 불구하고---근대화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를 추동하면서 사회를 선도했다고 한다면, 이에 대응하는 야당은 윤보선을 상징적 구심으로 해서 작동하고 있었다. 이는 야당이 시대적 선도성을 갖지 못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만년 야당신세를 멈추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야당은--당시로서는--보다 '급진적인' 김대중 후보와 김영삼 야당 지도자를 갖게 됨으로써 박정희 체제를 위협하기 시작하였다. 산업화와 근대화를 추동하는 신보수의 선도성을 위협하는 것은 오히려 급진적인 새로운 리더십이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 류의 신보수적 리더십과 경쟁하여 이를 넘어서는 새로운 급진적 비전을 갖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는 중도리버럴 정당에서도 나올 수 있고 민노노동당 같은 진보정당의 혁신 속에서 탄생할 수도 있다. 이미 독재 대 반독재의 반사이익만으로는 신보수의 '혁신'에

21) 복거일 인터뷰, "李정권, 햇볕정책 못 바꾸는 게 문제", 프레시안, 2007년 12월 28일.

대응하는 더큰 혁신을 성취하지 못한다면, 진보개혁은 60년대와 같은 만년야당의 신세를 지게 될 수도 있다.

### **민주노동당이 변화와 혁신을 단행하지 못한다면**

이처럼 신보수 정권에 대응하는 대항정치력의 중심과 관련하여, 민주노동당의 향방은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신보수정권의 출현은 민주노동당에게는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하다고 생각된다.

2007년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은 대중들의 ‘묻지마 변화’ 욕구에 대응하여 ‘변화와 혁신에 대한 대중적 요구’에 부응하고 대안적 이미지를 제출하지 못했다. 당내에서 현상유지론과 분당론의 양 극단의 견해를 넘어서서, 중도리버럴 정당의 변화와 혁신을 넘는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을 단행해야 한다. 기성정당에 비해서 보다 빠른 속도로, 대선 이후 변화와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문국현 공간’을 대중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변화의 리더십’으로 전유하기 위한 시각이 필요하다. 어떤 의미에서 ‘사표심리’도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 2007년 대선이 ‘이명박에 대한 투표’가 아니라 ‘노무현에 대한 투표’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동영으로 대표되는 중도리버럴 후보가 상실한 공간을 민노당이 획득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였다.

특히 대중들이 민노당을 ‘좋은 이야기를 하지만 대안정당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불식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특히 ‘무상의료, 무상교육’과 같은 ‘목표적 가치’로 투영되는 민노당의 주장을 ‘중기적으로 실현가능한 정책’들과 결합하면서 제출하지 못하였다.

여기서 잠시 필자는 민주노동당의 대선 패배를 둘러싼 논의에 대해서 첨언하고자 한다. 신자유주의 지구화 시대의 대항해게모니를 위해서는 (급진)진보정치의 ‘대중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중도리버럴 정치가 ‘급진적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고 한다면, (급진)진보정치는 대중과의 새로운 결합을 위한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는 말이다. 당내의 어떤 의미에서 ‘기득권 권력집단’이 대대적인 양보를 하고 자기혁신을 하는 방식으로 중도리버럴세력과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변화와 혁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이 점에서 당내 다수파의 ‘현상유지’적 입장을 당을 파괴적인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단지 당내 소수파 입장에서도 분당론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분당은 변화와 혁신에 대한 요구를 또다른 극단주의로 왜곡 해석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 **현상유지론과 분당론을 넘어**

사실 통합신당과 같은 중도리버럴 세력은 어떤 의미에서 ‘대안 리더십’이 부재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변화와 혁신을 단행하기도 어렵다. 반면에 민주노동당은 대안

리더십의 후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변화와 혁신을 질서정연하게 수행하기가 용이하다. 이런 점에서 신속하게 질서정연하게 변화와 혁신의 모습을 보이는 전열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필자는 대선 패배를 ‘분당론’의 강화계기로 이해해서는 안되는 몇가지 성찰적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모든 문제를 권영길 후보의 문제로 치환하는 것의 부적절성이다. 권영길 후보가 ‘자주파’ 후보여서가 아니라 참여정부로부터 이반한 대중들의 ‘문지마 변화 요구’가 너무도 강렬하여 ‘3선의 고령후보’ 자체가 이러한 요구에 결코 부응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후보인 이명박 후보와 새로운 후보인 문국현 후보가 이러한 점에서 큰 이득을 누린 셈이다.

둘째, 국면적 특수성이다. 필자는 조금 거시적인 시각에서, 2007년 대선이라고 하는 국면이 PD(민중민주주의, 평등파적 그룹들)적 정치의제가 대중적 접근성을 강하게 갖고 있는 조건이고 거기에서 패배의 많은 부분이 규정되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2007년 대선에서 NL(민족해방, 민족자주, 자주파적 그룹들)적 정치를 표상하는 권영길 후보가 선전할 수 없었던 요인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 지구화 시대에 중도리버럴 정치의 실패로 인한 대중생활의 위기는 정작 보다 급진적인 사회경제적 진보정책을 통해서 구현되는 비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 PD적 정치를 ‘반(反)불평등 정치’라고 할 수 있다면 NL적 정치의 핵심적 지향은 ‘반(反)식민주의 정치<sup>22)</sup>’ 혹은 ‘반(反)종속정치’ ‘민족자주 정치’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본다. 문제는 2000년 6.15선언과 2007년 10월 2차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인하여 NL적 정치의제는 중도리버럴 정치세력에 의해서 일정하게 전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남북간의 대결노선이 퇴조하고 평화공존노선이 정착하면 할수록 당면 국면에서 NL적 의제가 급진진보정치의 대중화의 의제로서의 지위가 약화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NL적 의제가 중도리버럴적인 의제에 의해서 해소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코리아연방공화국’ 같은 의제는 어떤 의미에서 NL적 의제를 국민적 의제로 부각시켜보고자 하는 시도였다고 평가된다. 오히려 더욱 급진적인 방식으로 NL적 의제가 운동에 의해서 쟁점화되어야 할 ‘국면’도 존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수혁의 표현대로 NL의 합리적 핵심은 ‘반식민주의’적 정신으로 이해할 때 근대제국주의적 맥락 혹은 2차대전 이후의 ‘신식민지’적 맥락에서 민족의 자립을 억압하는 반민족적 외세에 대항하는 ‘민족주의’적 정신으로 구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반식민주의적 행동주의는 단지 ‘민족-민족주의’적 범주 속에서 고착되어 표현될 필요는 없다. “식민화의 흐름에 대항하는 반식민지 행동주의는 국가 내부에, 국가 외부에, 우리들 내부에서 다양한 식으로 관철되고 있고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식민주의적 힘은 남한 내부로 본다면 ‘민족적 외세’로서의 미국에 의해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며 이미 남한의 친미적 세력들, 남한 내부의 자본세력들

22)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이 중요한 논점을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수혁, 2007, “NL운동의 분화 : 반식민주의 행동주의자들의 새로운 주체형성을 위하여”, 레디앙, 1월 3일.

등으로 ‘자립’하여 존재하고 있다(남한의 대자본은 이미 독자적으로 남한민중에 대한 식민화의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도 NL은 정신은 ‘반미주의적’ 정신으로만이 아니라 ‘반자본적’ 정신으로서도 구현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다.

또한 반식민화의 동력은 반민족적 외세에 대항하는 ‘민주기지’로서의 북한에 의해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며<sup>23)</sup>, 이미 남한 내부의 다양한 급진적 진보역량으로 구성되고 있다. 특별히 남한에서 변혁운동의 복원은 북한과는 구별되는 ‘반외세적 남한 진보역량’의 독자적 존재를 가능하게 했다. 이런 점에서도 NL은 결코 종북적 흐름으로만 이해되어서도 안되며 식민화의 지배적 힘의 변화를 고려할 때 PD적 NL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sup>24)</sup>. 이런 점에서도 필자는 이번 대선의 교훈이 NL적 그룹 자체가 ‘PD적 NL’로 변화해가는 하나의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도 분당이 아니라 상호침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NL과 종북주의 및 친북주의를 동일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필자는 NL은 --PD도 그러하데--더욱 분화되고 ‘분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NL그룹 내의 다양한 차이들이 차제에 부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NL적 정치세력 내부에 주사파적 그룹이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지만 분단상황과 친미패권적 구조와 국보법이 엄존하는 현실에서 NL적 정치의 소멸을 주장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NL적 정치 내부의 다양한 차이들이 주목되고 비주사파적인 흐름들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어떤 의미에서 NL을 주사파NL이나 종북주의, 친북주의로 규정하고<sup>25)</sup> 고정화하는 것은 오히려 주사파 내의 다양한 차이들이 다시 주변화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정확하게는 다양한 NL적 경향성들을 ‘도구화’해서 주사파적 NL이 헤게모니를 점유하고 있는 형국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NL의 다양성과 내적 차이의 인정은 PD가 스스로를 NL적 의제를 자기 방식으로 전유하는 계기를 제공한다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NL 대 PD대립 구도가 상이한 정당의 형태로 분화되기 보다는, ‘NL적 PD와 PD적 NL’의 구도로 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sup>26)</sup>. 대선 패배는 NL과 PD의 분리가 아니라, NL 내부의 다양한 차이의 분화, NL과 PD의 상호침투가 일어나야 하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넷째, 앞서 필자는 급진진보정치세력의 ‘대중적 혁신’의 과제를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급진진보정치세력의 성장을 위해서 대중화의 프로그램이 가동되어야 하지만

23) 필자는 일찍부터 ‘민주기지론’도 ‘북한 유일역량론’이 아니라 ‘남한혁명의 독자성론’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조희연, 1989, “북한의 통일노선과 통일정책에 대한 연구”, 한신대 제3세계 문화연구소 편, {한국민중론과 주체사상과의 대화}, 풀빛.

24) 더 나아가 NL의 합리적 핵심으로서의 반식민성과 반식민지 행동주의가 민족-민족주의의 유일경계를 따라 구현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 “새롭게 등장하는 다차원적인 식민성, 국가의 경계를 따라 만들어지는 식민성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세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식민성, 국가 경계를 넘어서 만들어지는 식민성에 저항”하는 행동주의로 확장해야 한다. NL이 외국인노동자에게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미 ‘몸은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입론의 지체가 있는 것이다.

25) 여기서 필자는 일부 NL의 종북주의와 친북주의에 대한 비판이 반북(反北)주의로 경도되거나 반북주의로 오해되거나 반북주의와 동맹해서도 않된다고 생각한다.

26) 조희연, 2007, “정파의 ‘재구성’”, 민노당 기관지 <진보정치>, 3월 2123일.

그것은 ‘좌파적 급진성’을 견지하면서 유지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PD적 그룹의 NL적 그룹에 대한 비판지점과 대중화를 위한 당의 혁신의 지점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불일치의 측면도 존재한다. 이른바 ‘쉐보르스키의 딜레마’, 즉 노동계급 등 자기 대중을 획득하는 과제와 중간층을 포함한 일반대중을 획득하는 과제 간에 긴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의 진보 정치운동에서 전자가 대단히 일천한 수준에--노동자계급도 민주노동당을 찍지 않는 현실--있다. 사실 문국현 공간의 획득이나 민주노동당의 ‘대중적 혁신’의 과제는 사실 중간층을 포함한 일반대중의 획득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단지 현재의 같이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와 중도리버럴 정부의 실패로 대중생활의 위기상황에서 중간층도 급진적인 요구를 수용할 공간이 커지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이 양자 간에 긴장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노동당과 같은 급진진보정치세력의 약진은 사실 제도정치적 공간에서의 노력만이 아니라 ‘반신자유주의적 정치’의 대중화를 통해서 대중들 자신을 변화시키야 하는 노력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단순히 PD적 의제의 대중적 제시의 문제로만 현재의 극복과제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 2)진보의 사회적 펀더멘털을 강화하기 위하여--사회적 차원

다음으로 대안적인 진보개혁의 실천을 제도정치적 차원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이는 대단히 일면적이고 제한적이 될 수 있다. 진보적인 사회(운동)적 실천과 결합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현단계 한국민주주의의 병목현상과 신보수 시대로의 전환은, 한국 진보의 사회적 펀더멘털(fundamental)이 여러 가지 지점에서 취약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한국민주주의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는--단순히 제도정치적 차원에만 주목하지 않고--이러한 취약한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노력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과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 여전히 ‘사회의 급진화’를 위한 노력이 일차적으로 중요

첫째, 이를 통해서 보다 급진화된 대중과 자신의 계급계층적 지위에 부응하는 노동자계급과 민중이 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대중의 급진화’, ‘사회의 급진화’ 테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필자는 ‘강남사람은 계급의식이 투철한데 강북사람이 계급의식이 없다’라고 표현한다<sup>27)</sup>. 한국 민주주의와 사회진보의 최대의 병목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

27)이 부분을 둘러싸고 필자와 강준만 사이에 논쟁이 있었다. 이 논쟁에 대해서는 아래 참조. 강준만, 2007, “조희연: 민중의 분노위험이 대안인가?”, <월간 인물과 사상> 5월호; 조희연, 2007, “한국 민주주의의 병목 지점과 그 돌파구는 무엇인가”, <월간 인물과 사상> 11월호; 강준만, 2007, “개혁·진보는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다”, <월간 인물과 사상> 12월호. ‘강남사람은 계급의식이 있고 강북사람은 계급의식이 없다’는 표현에 대하여, 강준만 교수는 ‘강남-강북의 이분법’을 비판하면서 “조희연은 민중의 분노와 위험을 동원정치의 동력으로 쓰자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조희연은 ‘한국사회가 87년 이후 20년 동안 ‘자유민주주의적 개혁’단계를 거쳐 왔는데 한단계 높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병목지점에 도달해 있고 이를 위해서는 ‘87년 6월



한다. 박정희식 선진화와 친기업적인 신성장정책을 추진하는 신보수정부가 대중, 그 중에서도 노동자계급까지를 포획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현시기 한국민주주의와 사회진보의 최대의 병목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한국사회는 근대적 계급정당이 뿌리내리기 전에, 즉 본격적인 계급투표로 이행하기 전에, 포스트-계급투표적 양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신보수정권의 친기업적인 성장정책의 문제점을 대중들이 체험하면서 신성장연합으로부터 대중들이 폭넓게 이반하고 새로운 평등연합이 구성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17대 대선은 ‘대중의 합리적 선택’이라는 견지에서 이는 민주진보개혁세력의 깊은 성찰과 반성을 요구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민주진보개혁세력이 극복해야 하는 대중적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제도정치적 노력만이 아니라 비제도정치적·사회운동적 과제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전반적인 계급적·사회적 역관계와 더욱 높은 수준의 한국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대중의식적 기반을 형성해 가는 과제 말이다.

어떤 의미에서 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형성한 ‘계급적 역관계’<sup>28)</sup>의 틀 내에서 성취할 수 있는 민주개혁의 한계지점에 도달했다고 보여진다. 87년 이후의 민주개혁을 가능하게 했던 계급적 역관계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포스트-민주화 시대의 새로운 진보를 추동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이다. 사실 앞서 양극화, 고용불안정 등의 새로운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인 사회정책을 참여정부가 취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사실 이러한 사회정책은 우리 사회의 거대한 계급적·사회적 기득권세력의 저항에 의해서 시행되지 못했다는 구조적 요인도 존재한다.

정작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의해서 고통받는 노동자계급과 민중은 정작 투철한 계급적 의식이 존재하지 않으며 ‘변형된 반공주의’---과거의 수평적인 대결적 반공주의에서 ‘체제우월론적 반공주의’로--에 의해서 그 계급적 각성이 질곡 되고 있다. 물론 여기에 글로벌한 차원에서 모든 사람을 순응하면서 경쟁력 제고를 향하여 달려 나가도록 촉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효과가 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작 이러한 현실에서 고통스런 현실에서의 최대의 피해자 계급과 계층들은 그에 상응하는 계급의식과 계층의식이 없는데, 반대로 최대의 수혜자 계급과 계층은 ‘투철한’ 의식이 있는 셈이다. 필자는 이를 “강남사람들은 계급의식이 투철하고 강북사람들은 계급의식이 없다”라고 표현한다. 우리 사회의 상층계급은 자신의 이해를 보호하는 정당을 잘 아는데 노동자들과 중하층계급은 자신들의 계급적 정당을 잘 알지 않는다. 이것이 현존 계급적 역관계의 의식적 내용이다. 바로 이러한 의식적 조건들을 급진적으로 변화시켜 내지 않는 한, 신보수 정권시대의 새로

---

민중항쟁적 대중'이 보다 '급진적 대중'으로 전화되고 그를 통해 보수의 강고한 저항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반론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강준만 교수는 노무현 정부--혹은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진보세력--은 대중에게 다가가는데 어떻게 대중과의 소통에 실패했는가를 반성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28) 필자는 계급적 역관계, 정치적 역관계, 정세적 역관계를 구분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조희연, 2006, “참여정부에 대한 실망과 절망을 ‘급진적 열망’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레디앙} 11월 1일,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3542>.

운 모순들이 현재화되더라도 그것은 진보적 지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다. 한국형 복지사회, 한국형 사회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더욱 급진화된 대중주체들이 출현해야 한다. 부유층에 대한 세금 중과 정책에 대해서--스스로 세금을 내는 위치가 아니면서도--‘세금폭탄’이라고 인식하는 대중들이 존재하는 한 복지국가로 가는 길은 요원할 뿐이다. 이제 국민들이 계급적·사회적으로 분열·분화되어 있다는 것, 이제 시민들이 계급적·사회적으로 분열·분화되어 있다는 것을 직시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전 점에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파괴적 결과에 저항하는 분노한 노동자, 농민, 다양한 하위주체들이 출현하지 않는 한 ‘민주개혁’을 뛰어넘는 진보를 성취하기가 어렵다. 신보수시대에 그에 대응하는 사회공공적 국가를 상상하도록 하는 새로운 계급적·정치적 의식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sup>29)</sup>.

### 진보의 지역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과제

둘째, 지역 및 풀뿌리 수준에서 ‘진보의 펀더멘털’을 재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신보수정권 시대에 한국사회의 전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신보수에 대응하여 새롭게 진보의 사회적 펀더멘털을 강화하고 재구성하고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진보의 사회적 펀더멘털에는 풀뿌리 수준에서 그리고 지역수준에서 진보의 굳건한 대중적 기반을 확장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 한국의 진보는 이 점에서 취약성을 노정해 왔다. 더욱 급진적으로 여겨지는 PD가 NL에 비해서 대중사업이 취약한 것, 시민사회운동이 중앙정치를 둘러싼 사업에서는 영향력을 갖지만 풀뿌리 대중들의 삶의 수준에서 기반이 취약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87년 이후 지난 20년 동안 일정한 진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의 진보가 바로 이러한 펀더멘털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된다.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대중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지역대중의 삶 속에서 대중을 진보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민주화 20년을 돌이켜 보면, 중앙정치의 민주화가 일정하게 성취되었지만 여전히 풀뿌리, 대중 삶의 수준에서는 보수의 기반들을 균열시키지 못하였다. 새롭게 지역으로, 지역대중의 삶 속으로 뚫고 들어가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sup>30)</sup>. 이런 점에서 지역대중의 삶을 재발견해야 한다.

민주화의 한 차원으로서의 지방화의 지향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중앙 중심의 개발주의는 지방에 일정하게 재분배하는, 혹은 개발의 지방화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는 부동산 가격 폭등 등 새로운 문제점을 동반하게 되었다. 더욱 근본적으로 신보수의 기반을 해체하기 위한, 구보수의 기반을 해체하기 위한 진보적 흐름

29) 이 부분에 대한 서술은 조희연, 2007, “한국 민주주의의 병목 지점과 그 돌파구는 무엇인가”, <월간 인물과 사상> 11월호 참조.

30) 이 점에서 필자는 시민운동의 이른바 ‘비정치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 특정 정파를 옹호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의 비정파성(non-partisanship)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시민운동이나 풀뿌리 활동가들이 다양한 지역정치사업에 참여하고 지역의회 등에 진출하는 등 다양하고 다층적인 지역실천이 진작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든다.

들이 강화되어야 한다.

여기서 안보투쟁 실패 이후의 일본 운동이 광범위하게 지역대중의 삶으로 들어갔던 것처럼--그래서 교과서 파동도 성공적---우리도 하방(下方)하는 의미로 이러한 대중사업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의미에서 중앙정치적 수준에서의 일정한 진보개혁의 진전이 지구적 차원에서 신자유주의적인 흐름과 지역 및 풀뿌리 수준에서의 보수적 흐름에 의해서 압도당하는 형국이 현재의 형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87년 이후 20년 동안 성취하지 못한 풀뿌리 및 지역 수준에서의 대중들의 삶 속에서 진보가 뿌리내리도록 하는---동시에 보수의 영향력을 펀더멘털한 수준에서 균열시키는--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사회)공공성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대항체계모니적 전선

셋째, 이러한 급진화의 과제는 국민적 차원에서 신보수적 기조에 대립하는 ‘(사회)공공성’을 옹호하기 위한 국민적 전선을 형성·유지하려는 노력과 함께 가야 한다. 앞서 필자는 신보수정권의 등장이 ‘평등연합의 신성장연합으로의 대체’를 의미한다는 것을 언급한 바 있다. 신보수정권이 신개발주의·신성장주의를 전면화하고 시장경쟁의 원리를 대중들의 전 삶의 영역으로 확장하게 될 것이다. 필자는 이점에서 한국사회는 ‘경쟁의 부족사회’가 아니라 ‘과잉경쟁사회’라고 생각한다. 어떤 의미에서 경쟁이 내포하는 ‘합리성’을 뛰어넘어, 과잉경쟁으로 인해서 그 합리성이 파괴되는 지점에 도달했다고 본다<sup>31)</sup>. 시장경쟁원리의 확산은 자연히 대중들의 전삶의

31) 필자는 한국의 자본진영과 보수세력이 ‘경쟁 절대주의’적 사고에 사로 잡혀 ‘미시적 합리성’만을 중시하고 오히려 ‘거시적 합리성’을 배반하는 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자본의 입장에서, 세계 12대 무역대국 또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가 되는 경제에서, 비정규직이 800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적정인지 4백만, 아니 6백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이제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당장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하는 차원이 아니더라도, 이제 한국기업들도, 특히 대기업일수록, 미시적인 합리성이 아니라 거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한국경제를 바라볼 때가 되었다. 한국의 대기업과 자본, 시장의 주요행위자들은 ‘싼 것이 비지떡’이라고 미시적 합리성에 기초하여 무조건 싸게 싸게 경제를 운영하려고 한다. 그러다가 실제로는 더 큰 비용을 치루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얼마전 KDI에서 수조원이 넘는 시위비용이 든다는 분석을 내놓았던 적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시위자제를 촉구하는 근거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내 입장에서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들지 못해서는 나타나는 위기의 징후이다. 그렇게 시위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도 시위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드는 새로운 고민이 중요하다고 해석한다. 또한 많은 대학생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에 바쁘고 토플 등 영어시험에 목매달고 의사, 교사 등 안정적인 자격증 따기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지구화시대에 주요한 경쟁력의 원천이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력이라고 할 때 과연 현재와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10년 혹은 20년 후에 기업에 필요한 창의적 인력들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국제경쟁력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또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그 국제경쟁력의 질곡에 있다고 하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우리의 경제가 너무 천민적으로 가혹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이는 물론 거시적 합리성에 반한다. 미래의 한국경제와 사회의 주역들이 만사 제치고 ‘안정적인 직장찾기’를 위한 사투(死鬪)를 벌리는 이 ‘사회적으로 지속불가능한’ 현실을 성찰해 보아야 한다. 이것은 고성장이냐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이 ‘지속가능한 사회시스템’을 갖지 못한 고성장과 경제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한국경제는 점차 이른바 ‘자산주도형 투기경제’로 되어가고 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생산적으로 돈을 벌려고 해야 하는데, 적당히 부동산 투자나 하고 안정적인 건물임대주로 살아가려고 하고, 로또 복권하듯이 증권투자에 매달려 있다. 한 사회에서 잘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창의력과 혁신된 상상력으로 경쟁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이미 썩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동맥경화현상에 대해서 적절히 숨통을 트면서 혁신의 기풍과 숨통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영역에서--잠재적으로나 현재(顯在)적으로나--다양한 저항들이 전개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저항들은 결국 대중들의 전 삶의 영역에서 (사회)공공성을 실현하고 확장하고 옹호하고자 하는 운동의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신성장연합에 대항하는 새로운 평등연합은 다양한 대중들의 요구들을 수렴하는 (사회)공공성연합의 성격을 띠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신성장연합이 반독재 중도리버럴 정부에 의해 이반된 다양한 대중들의 요구를 수렴--성장 경제담론에 의해 포획함으로써--하는 기조 위에서 출현했듯이 말이다.

신보수의 친기업적인 신개발주의·성장주의에 반대하는 반(反)신보수전선은 급진적인 노동세력이나 민중세력만이 아니라 폭넓은 중도세력과 심지어 보수세력의 일부까지도 이반하여 참여하는 폭넓은 대중전선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새로운 평등연합이 대항해게모니적 전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sup>32)</sup>.

그리고 새로운 (사회)공공성을 위한 평등연합은 70·80년대의 반독재연합이나 90년대 민주개혁연합과는 다른 다양한 대중적 동력을 수렴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 반독재와 민주개혁은 여전히 많은 과제들을 남겨놓고 있지만, 그러나 대안적 프레임 속에서 새로운 동력을 수렴하는 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반독재와 민주개혁으로 수렴되지 않는 다양한 대중들의 요구와 이해가 결합되어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의제연합', 새로운 '요구연합'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반독재연합과 민주개혁연합이 '대한민국 국민연합'이었다고 한다면 이는 외국인노동자도 포함하는 것이며 다양한 사회경제적 하위주체들이 참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새로운 평등연합은 주도집단의 입장에서 보면 훨씬 급진적인 지향들을 담지하는 것이지만, 새로운 주체와 동력들이 결합되는 것이어야 하고, 이 점에서 기존의 진보주체들은 새로운 개방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민족주의적 공공성'만으로 협애화할 필요가 없으며, 반독재운동과 민주개혁운동의 '연줄'과 네트워크를 뛰어넘는 것이어야 한다.

경제적 측면에서만 보면,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사회)공공성 실현투쟁은 참여정부, 더 소급하면 국민정부 하에서도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이는 효과적으로 대중화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신보수 정권에 의해 지구적인 수준에서 전개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흐름과 조응하는 친기업적·친시장적 신성장주의 정책기조를 전면화되는 것에 대응하여, 사회복지와 사회정책들을 옹호하고 시장에 대한 공적·사회적 규제를 요구하는 (사회)공공성<sup>33)</sup> 투쟁이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사실 한국에서 개방화와 시장친화적 구조개혁이라고 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정부 등 반독재 민주정부 하에서 시행되어져 왔다. 그러나 이들 정부 하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반대하는 저항이 '억제'되거나 그 대중적 파급을 제약되는 경향이 있었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추진하는 민주정부 통치세력이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반대하는 진보개혁세력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지

32) 노무현 정부의 실패의 요인 중의 하나는, '도덕적 이원론'의 관점에서, 중도세력이나 보수세력의 일부를 헤게모니적으로 결합해내는 노력이 부족하였다. 정책집행의 차원에서도 이러한 고민이 부족하였다. 이제 중간지대의 대중을 획득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 폭넓게 참여하고 동참하게 하는 문제일 수도 있다.

33) (사회)공공성에 대한 논의로는 <시민과 세계> 11호(2007년 상반기) 참조.

않고, 정치적 개혁을 둘러싸고는 반독재 민주정부세력과 보수세력이 대결하지만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를 둘러싸고는 대립하지 않는 ‘저항의 분산화’ 경향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중첩되는 것을 방지해주기 때문에, 저항의 억제효과를 낳는다. 그러나 신보수정부 하에서는 여러 차원의 사회적 갈등이 신보수적 정부 및 보수세력 대 반대세력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에서 시장화와 상품화, 상업화를 확대하고 시장자율적·친기업적 정책을 전면화하고자 하는 흐름과 반대로 (사회)공공성의 이름으로 이러한 시장적 질서를 공적·사회적으로 규율하며 나아가 친기업적 정책에 반대하고자 하는 흐름 간의 대립이 강화될 개연성이 크다. 이를 통해서 광범위한 대중적 연합전선을 구체화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대립구도는 신보수 정권 시대가 출현하면서 과거 독재 대 반독재 구도로부터--(민주)개혁 대 반개혁의 구도를 경유하여--포스트-민주화 시대의 새로운 구도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사회)공공성 실현투쟁은 포스트-민주화 시대의 급진민주주의적 기획이고 그 핵심담론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민주화 20년 동안 ‘자유민주주의적 개혁’이 상대적으로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본다. 이제 보다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이를 필자는 사회(적)민주주의 혹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단계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로 이행하는 병목지점에 도달했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중도리버럴 세력의 대중의 지지를 상실하고 (급진)진보세력이 대중적 대안세력으로 부상하지 못하는 조건에서, 혁신된 보수세력이 대중들의 지지를 획득하는 상태에 도달했다고 생각된다. 일종의 우회로를 경유하는 조건에서, 한국의 진보개혁세력은 ‘민주주의의 급진적 확장’을 통해서 더 높은 수준의 사회경제적 개혁주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전의 ‘반독재’와 ‘민주개혁’이 전제하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넘어, 사회경제적 차원으로의 민주주의의 확장, 폐쇄적 민족주의를 뛰어넘는 민주주의의 확장, 다양한 생활세계적 영역으로의 평등원리의 확장을 포함하는 급진민주주의여야 한다. 신보수 시대는 ‘급진민주주의적 진보’의 대중화를 위한 시련기이자 준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급진세력은 때로는 계급담론으로 반자본주의적 담론으로 이러한 높은 수준의 개혁을 추동해야 하지만,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국민적 합의가치가 된 민주주의를 급진적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더욱 높은 단계의 개혁을 추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시대의 신보수정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급진민주주의적 프로젝트’가 (사회)공공성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

### 보수적 언론권력에 대한 인식

넷째, 이러한 새로운 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보수적 언론권력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sup>34)</sup>. 신보수 시대에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여러 문제들이 현재화될

34) 이 부분에 대한 서술은 조희연, 2007, “한국 민주주의의 병목 지점과 그 돌파구는 무엇인가”, <월간 인물과 사상> 11월호를 기초로 하였다.

때 대중들의 이반이 급진적 희망으로 경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대중들이 ‘시각’ 혹은 ‘현실인식 패러다임’이 바뀌었고 그 출발점은 계급적 언론권력과 대응이 필요하다. 여기서 필자는 이전과는 언론권력에 대한 태도가 긴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예컨대 조선일보는 이제 독재적 유산을 옹호하고 민주개혁을 반대하는 ‘반(反)개혁지’일 뿐만 아니라 계급적·사회적 기득권세력의 이해를 옹호하는 새로운 ‘계급지(階級紙)’로서의 성격을 지배적으로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87년 이후 최근까지의 사회운동은 과거의 독재 하에서 고착된 비민주적 구조를 개혁하는 ‘민주개혁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져왔다. 시민운동은 이를 선도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상황 속에서 새로운 ‘신계급사회’적 현실에 대응하는 운동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여기서 필자는 바로 ‘반(反)자본주의 담론’으로 비월(飛越)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중담론으로서의 ‘공공성 담론’을 중시하게 된다. 우리 사회의 계급적·사회적 기득권세력은 우리 삶의 더욱 많은 것을 시장논리에 의해서 해결하도록 하는 ‘친(親)시장주의’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사회경제적 약자를 포함한 대중들은 우리 삶의 더욱 많은 것들이 시장에 내맡겨지지 않고 공공재로 공급되도록 하는 복지사회를 지향한다.

그런데 대중들은 강력한 평등주의적 의식을 가지고 현재의 양극화와 비정규직화, 사회경제적 삶의 하락 등에 분노하면서도 그것을 신개발주의적·신시장주의적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일종의 ‘신보수적’--의식으로 경도되고 있으며 이른바 조중동으로 상징화되는 보수적 계급지(紙)의 매일매일의 ‘계급적·정치적 교양’을 받으면서 일종의 ‘신보수적’ 의식으로 경도되고 있는 것이다<sup>35)</sup>.

사실 개인적으로 필자를 포함하여 진보적 지식인들도 50년대 이래의 반공주의적 의식제약을 고려하면서 온건한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관례로 해 왔다. 그러나 요즘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즉 대중의 의식적 급진화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다 분명한 계급적·정치적 언어로 이야기해야 하지 않는가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것은 80년대식의 계급담론을 확산해서 혁명주의적 지향을 관철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대중들의 의식적 급진화를 제약하는 담론구조와 이데올로기적 인식지평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너 좌파지’ 하면 ‘나는 좌파가 아니에요’ 하는 것이 아니라 ‘새는 좌우로 난다’ ‘좌파는 좋은 것이야’ ‘좌파는 평등을 지향하는 적극적 가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식 말이다<sup>36)</sup>.

35) 강준만은 조희연이 “노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엔 보수언론이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보는 동시에 보수언론 해체모니의 지속은 대중의 분노를 촉발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다”(앞의 글, 72쪽)고 전제하고 있다. 필자는 참여정부라고 하는 ‘중도자유주의적 정부’에 대한 보수언론의 비판이 비록 보수적 정치적 지향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지만 ‘역설적으로’ 대중들로 하여금 중도자유주의적 개혁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수준의 요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현재의 대중적 의식조건에서 ‘보수정당’에 대한 지지로 표현되고 있지만 그것은 보수정당의 정책으로 수렴될 수 없는 ‘급진적 요구’를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잠재성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에는 계급지로서의 보수언론과의 새로운 싸움이 내포된다. 이 점에서 황진태가 “과거 강준만의 ‘조선일보 제몫 찾아주기 운동’ 초창기에 개혁진영에서 누군가가 설사 그 일이 가능하다 한들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론으로 폄하하는 의견이 나왔다면 당시의 강준만으로서는 가만히 있었을까”(황진태, 2007, “강준만의 「조희연: 민중의 분노.위험이 대안인가?」를 읽고”, {월간 인물과 사상} 6월호, 80쪽)라는 표현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36) 한국에서 여전히 ‘좌파’는 ‘불온한 언어’로 되어 있다. 정부 차원의 초청으로 기든즈를 초청해 그의 조언을

신보수 시대에 새로운 대항담론은 보수가 진화한 것처럼 진보담론 역시 급진적인 방향으로 진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 5. 맺으면서-사회경제적 개혁주의를 실현하는 새로운 ‘반신자유주의 정치’를 통해서 아시아 민주화의 새로운 경로를

한국은 아시아의 민주화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독재세력과 반독재세력의 ‘경계’가 선명한 편이다. 그런데 반독재세력이 집권한 참여정부 하에서 ‘과거 독재와 다른 방식으로 대중이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운영의 패러다임을 가시화하지 못하였다. 그런 속에서 이명박 류의 ‘경제회생 담론’이 대중화될 수 있었다. 이제 신보수 정부 시대에 저항세력이--재편되면서--신보수적 경제담론에 대응하는 새로운 대항 경제담론 및 대안 사회국가모델을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sup>37)</sup>.

아시아의 많은 나라에서 민주화과정에서 존재하는 병목지점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 있다. 선거라고 하고 하는 ‘불확실성’을 내장하는 민주주의적 경쟁형식의 도입과 그 경쟁형식을 통한 국가권력 담당주체의 변화이다. 이것은 정치적 민주화의 제도와 관행이 정착하느냐의 문제이다. 어떤 의미에서 한국 등에서는 이러한 병목지점을 이미 통과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또 다른 병목지점은, 독재 하에서 억제된 사회경제적 하위주체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개혁주의가 실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과제를 둘러싸고 조성된다.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등 많은 아시아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민주화의 제도와 관행의 문제를 둘러싸고도 지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한국이나 대만 등 일부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과제에서 성공적 경로를 보여 왔다. 그러나 이들 나라에서도 후자의 과제를 둘러싼 각축에서는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많은 아시아 사회에서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하위주체들의 요구와 이해가 정치와 국가 수준에서 실현되도록 하는 사회경제적 진보의 힘이 강화되지 못하였다. 그러한 요구와 이해가 실현될 정도로 ‘민주화 이후의 정치공간’이 확장되지 못했으며 국가가 사회경제적 개

경청하면서 정작 그가 쓰는 좌파(left)--물론 그는 좌파의 혁신으로 중도좌파(middle left)의 경로를 추구하고 있지만--라는 용어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역설적이다(A. 기든즈, 한상진 옮김, 2001, {제3의 길}, 생각의 나무; 애서니 기든즈, 김현옥 옮김, 1997,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 한울). 보비오는 좌파의 핵심을 평등주의적 지향으로 보고 있다. 우파가 현실적 불평등의 불가피성을 받아들이는 반면에 좌파는 그것의 불가피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극복하려고 하는 지향을 갖는다고 본다. 그리고 우파가 개인과 시장의 자유를 중시한다면 좌파는 그 자유와 불평등의 긴장을 주목한다. “좌파의 공적은 자유권을 넘어, 사회권을 확인하고 찾아낸 것”이라고 보비오는 보고 있다(노르베르토 보비오, 1998, {제3의 길은 가능한가 - 좌파냐 우파냐}, 새물결, 123쪽). “더 많은 사람들의 더 많은 평등”을 추구하는 세력을 좌파라고 할 때 이 땅의 진보주의자들은 모두가 스스로를 좌파라고 이야기해야 한다.

- 37) 물론 이러한 것은 단순히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신보수적 정치세력의 집권에 대응하여 중도자유주의적 정치세력과 (급진)진보적 정치세력이 사회경제적 진보주의의 비전과 정치력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정치적 과제, 즉 지구화 시대의 구조적 특성인 ‘단절의 경제’를 보완하고 정정하는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들어내는 만들 대안적 정치적 주체의 현실화 문제가 부각되게 된다. 현재 ‘경제’라고 표현되는 문제가 대선에서 최대의 이슈가 된 것은, 지구화시대 한국경제의 어려움을 옹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지구화시대의 그 어려운 조건에서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들지 못해서 나타난 결과이다. 그러한 경제를 만드는 과제는 바로 정치에서 주어진다.

혁국가로 상승하지 못하였다. 한국에서 신보수 정권시대의 출현은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병목지점에서 일종의 ‘우회로’를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우회로에 들어선 한국이, 신보수 정권시대에 ‘사회경제적 개혁주의를 실현하는 새로운 ‘반신자유주의정치’를 실현함으로써 새로운 민주화의 경로’를 실현해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형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아시아 민주화의 경로에 큰 교훈을 던져주게 될 것이다.

향후 이명박 정부 하에서 대중의 지향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는 하나의 경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대중의 급진화’·‘사회의 급진화’의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 더욱 낙담하고 ‘체념한 비행동적인 대중’이 출현할 것인가. 이러한 두 가지 대중의 출현 가능성은 한국의 정당정치가 미국형 정당정치구도(진보정당이 뿌리내리지 못하거나 주변화된 경우)로 갈 것인가 유럽형 정당정치구도(중도리버럴 정당의 공중분해와 주변화)로 갈 것인가하는 기로에 서 있음을 의미한다. 개발독재적 구 보수에 대한 저항 속에서 한국은 이미 미국형 구도를 뛰어넘는 상태에 진입하였다. 그러나 신보수 시대로 진입하면서 이러한 구도는 역전될 가능성도 내재해 있다. 그런 점에서 신보수에 대한 성공적인 응전은 한국정당정치의 변화 경로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국정당정치 변화의 경로는 여러 정치적·사회적 세력들의 각축의 결과로 구성되는 것이지. 미리 정해진(pre-determined) 경로를 밟는 것은 아니다. 중도리버럴의 붕괴로 인해 조성된 공간을 신보수세력이 전유해가는 상황에서, 신보수정권의 새로운 문제점을 계기로 급진진보정치세력이 이를 급진적으로 재전유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신보수 정권에게는 자신들의 ‘새로운’ 친기업적 신개발주의 드라이브가 동반할 ‘새로운’ 도전들에 어떻게 응전할 것인가하는 과제가, 중도자유주의 정치세력에게는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파괴적 결과를 상쇄하는 급진화된 혁신 중도리버럴 프로젝트를 개발해야 하는 과제가, 급진진보적 정치세력과 사회세력에게는 사회경제적 개혁주의를 내부화한 ‘반신자유주의 정치’를 대중화하는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겠다. 신보수 정권시대의 등장을 아시아 민주화의 일반적 경로에서 보면 ‘퇴행’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 어떤 의미에서 포스트-민주화 시대의 새로운 경로로서의 일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86년 필리핀 민중혁명과 87년 6월 민주항쟁이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에게 선도적인 민주화사례였다고 하면, 이제 한국의 신보수 정권 시대의 개막과 이후의 저항의 행로는 또다른 의미에서 아시아의 많은 민주화국가에게 새로운 선도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 2007 대선 평가와 향후 전망: 진보정치의 입장에서

이광일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부관장/정치학)

### 1. 대선, 남겨진 숙고의 문제들

이번 17대 대통령선거(이하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48.67%로 전체 투표수 23,612,880표 중 11,492,389표를,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후보는 26.14% 6,174,681표를, 무소속 이회창후보는 15.07% 3,559,963표를, 그리고 창조한국당 문국현후보 5.82% 1,375,498표를 획득하였다. 진보를 대표한다고 자임한 민주노동당 권영길후보는 3.01% 712,121표를, 한국사회당 금민후보는 0.07% 18,223표의 매우 저조한 득표를 기록했다.

이러한 선거결과에 근거하여 권력의 행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다수 언론들과 정치평론가들은 한나라당의 ‘압도적 승리’를 전제로 선거 의미에 대한 총평과 향후 정치전망을 제출하고 있다. 이미 현 정권에 의해 통과되기는 하였지만, ‘이명박특검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연이은 거부권행사 요구, 그리고 특검 대상자들의 헌법소원, ‘수정특검법’ 발의기획 등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진정 이것이 전부인가. 한나라당의 승리는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저 ‘그들의 말과 글’에 휩쓸릴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첫째, 투표율과 지지율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에 대한 평가, 둘째, 이명박정권을 ‘실용정부’로 규정하는 것이 지니는 이데올로기적 함의, 셋째, 집권 자유주의정치세력의 패배 요인과 향후 예상가능한 정치적 행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보정치세력의 완패 이유와 진보의 재구성 문제 등을 중심으로 하여 개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 2. 한나라당의 ‘압도적 승리’에 가려진 것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압도적으로 승리하였는가. 답은 ‘그렇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율과 득표율에 대한 상이한 해석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이번 선거의 최종투표율은 전체유권자 37,653,518명 중 23,732,854명이 투표하여 63.0%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6대 대선의 70.8%보다 7.8% 하락한 것으로 87년 대통령직선제 실시 이후 가장 저조한 투표율이다.

그렇다면 전체 유권자 가운데 37% 정도가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를 고려해 산술적으로 추산해 보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전체유권자 가운데 약 30.5% 정도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압도적 지지’에 의한 당선이라는 평가는 전체유권자 가운데 16.3%를 획득한 2위 정동영 후보 등 여타 후보에 대해서는 유효하지만, 다른 한편 거기에는 상대적 의미 또한 함축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체투표자 대비 득표율과 전체 유권자 대비 득표율은 16대 당선자 노무현후보의 48.47%, 34.33%에 미치지 못하며 15대 김대중 후보의 투표자대비 득표율인 39.65%보다는 높지만, 전체유권자 대비 득표율 31.97%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전망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오히려 투표하지 않은 부분의 성격과 행보이다. 이번 선거에서 정권교체의 열망에 지배받은 보수정치세력 지지자들의 결속력은 매우 높았다. 이명박후보의 지지율에 무소속 이회창후보의 지지율을 합한 63.74%가 보수파를 지지하였고 이것은 전체유권자의 39.97%이다. 지난 16대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가 투표자의 46.17%, 전체 유권자 가운데 32.70%를 획득한 것을 고려할 때, 이번 선거에서 정권교체를 열망한 보수정치세력의 지지층은 투표할 만큼 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추할 때, 기권표에는 항존하는 정치적 무관심층 이외에 개혁적이거나 진보적인 성향의 표가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이른바 ‘여론조사선거’라고 할 만큼 선거결과가 거의 결정되어 있었기에, 또는 기존 진보정당들의 퇴영적인 모습과 새로운 의제(agenda)가 빈곤하였기에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투표와 연결시키지 않은 층이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주노동당 지지자 가운데 적지 않은 부분이 ‘반한나라당 전선구축’이라는 ‘이심전심의 내부방침’ 아래 열린우리당 후보 등을 찍었을 것이고 또 다른 적지 않은 부분은 그 동안 민주노동당이 보인 진보에 어긋나는 반민주적 행태에 실망하면서 기권했을 것이다. 이것은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가 여론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한 조사결과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즉 투표장에 나간 민주노동당 지지자 가운데 권영길후보 지지비율은 23.5%에 불과했고 그 나머지는 정동영(23.6%), 문국현(18.8%), 이명박(17.7%), 그리고 이회창(12.5%) 후보의 순으로 투표를 했다. 또한 민주노동당 지지층의 투표율은 한나라당 지지층의 88.0%, 대통합민주신당의 84.4%, 무소속 이회창의 88.5%, 그리고 창조한국당의 80.2%와 비교할 때, 74.7%에 불과했다. 결집력이 낮았던 것이다. 다른 한편 한국사회당의 경우, 비록 그 지지율은 실질적 당원 수는 넘었지만, 지난 16대 대선에서 받은 0.089% 22,063표에 비추어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던 수치를 훨씬 밑돌았다. 한국사회당 지도부의 창조한국당의 “사람중심 진짜경제”에 대한 호감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지자들 가운데도 이탈표와 당의 그러한 분위기에 실망한 적지 않은 수의 기권표가 존재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사족이지만, 여기에 더하여 현실에 대한 불만으로 막연히 진보를 선호하는, 그리

하여 지난 16대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이나 사회당을 지지했던 ‘반골지질의 일반 대중’ 가운데 일부분은 경제공화당 허경영 후보의 ‘재미난 행태와 속 시원한 공약’에 끌려 그에게 투표했거나 기권했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처럼 투표율과 득표율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밖에 없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 하나는 이들 기권표의 성격을 무시한 채, 한나라당의 ‘압도적 승리’라는 평가에 기대어 향후 정치지형의 변화를 점치는 것은 보이는 현상을 너무 과잉 평가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명박 특검의 행보를 제한하려는 한나라당의 일련의 시도들, 당권 및 공천을 둘러싼 한나라당 파벌 사이의 긴장과 갈등의 해소 여부, 그리고 좀 더 구조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우파’로서 이명박정권이 취할 글로벌 자본, 거대자본 유착의 정책 등이 앞에서 살핀 기권자들을 이명박정권을 비판, 반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가능성을 예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집권 자유주의 정치세력, 그리고 진보정치세력이 향후 어떻게 재구성될 것인지 여부에 따라 이들 기권층의 정치적 행보가 이들에 대한 지지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특히 이번 선거에서 완패한 진보진영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다가오는 4월총선 대책,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향후 이명박정권이 취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강한 신자유주의 공세와 그에 대한 대응을 염두에 두면서 이 드러나지 않은 기권층에 대한 좀 더 객관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 기권자들 가운데 다수가 진보정치세력을 지지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는 없지만, 기권자 37% 가운데 최소 10-15% 정도의 진보성향 유권자가 어떤 의제를 매개로 어떤 정치적 행보를 보이는가는 향후 진보정치세력의 위상 변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의 행보는 진보정치세력이 어떤 성격과 모습으로 다시 재구성될 것인지 여부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어찌되었든 진보의 덕목은 무엇인가. 현상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그 속에 가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드러내주고 그 의미를 재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또한 진보의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 3. ‘실용’이 압도한 선거와 이명박 ‘실용정권’이라는 평가: 현실을 가리는 이데올로기

거의 대부분의 언론은 이번 선거를 ‘이념이 탈각되고 실용이 압도한 선거’라고 합창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이러한 평가는 보수의 언어로 현실을 가리고자 하는 반지성적인 평가이다. 지금 지구적, 일국적 수준에서 전개되는 정치의 신자유주의라는 이념, 발상에 의해 압도적으로 지배되고 있기 때문이다. 97년 이른바 IMF위기 이후 자유주의정치세력이 신자유주의로 전화한 이후 한국정치의 궤적 또한 이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번 선거 또한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이념이 탈각되었다고 하니 기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것은 이명박 후보에 대한 20-30대의 지지를 두고 ‘젊은 세대=진보’라는 등식이 깨졌다고 규정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실용주의’가 승리하였다는 평가를 무반성적으로 제출하고 있는 현실이다. 물론 자사의 기사에 대한 대중적 관심의 제고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다수 언론, 권력과 시장의 동향에 민감한 여론조사기관과 정치컨설턴트 등의 입장에서는 이런 ‘자극적 평가’가 필요할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들은 그 근거가 견고하지도, 적실하지도 않다. 사실 이들 세대의 거의 다수는 신자유주의 이외에 어떤 이념과 발상, 대안들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어떤 사회관계와 권력관계 위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이들은 집권 대통합민주신당과 야당인 한나라당이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정치세력인지 여부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한다. 아니 그럴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 다수의 일반 대중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바로 그렇기에 이들 가운데 적지 않은 이들이 내용을 따져보지도 않은 채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이라는 신자유주의정치세력들의 선동적인 말 한마디와 자신의 미래를 기꺼이 바꾸는 ‘투기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지배적 이념인 신자유주의와 그 대안에 대해 고민하면서 투표를 하는 것과 모르면서 하는 것은 외견상 종이 한 장 차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이다. 사정이 이런데, 이들 세대에 “당신은 스스로를 진보적 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보수적이라고 생각합니까?”라고 물어 그 응답률로 이들의 진보성 여부를 규정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 또한 젊은 세대의 특성상 이들 가운데 스스로를 보수적이라고 응답할 대상자들이 얼마나 되겠는지를 고려할 때, 이러한 데이터를 전제로 이들을 진보로 설정한 후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젊은 세대=진보’라는 등식이 깨졌다고 분석한다면, 이것은 너무 자의적이다. 물론 참고자료로서 이들 데이터들이 지닐 수 있는 의미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연구자적 입장’에서 바로 이런 한계로 인해 ‘양적 조사방법’은 물론 ‘질적 조사방법’ 또한 존재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묻고 싶을 뿐이다.

따라서 이번 대선 결과를 ‘이념의 탈각’과 ‘실용주의의 압도’라는 언술로 대립시켜 비교,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오히려 그것은 신자유주의라는 하나의 이념, 발상이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비대칭적인 사회관계, 현실의 결과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다수의 대중은 신자유주의의 지배 속에서 그것을 넘어 나가는 수고에 관심을 지니기보다 그 꿈의 실현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그 안에서 자신들만의 안온한 삶의 자리를 마련하고 싶어 한다. 그리하여 이들은 이런 저런 기술들을 습득하여 자신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일련의 사교육 과정들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것 아닌가. 바로 이것이 신자유주의가 말하는 실용주의 아닌가.

이런 맥락에서 자칭 진보를 자처하는 언론들조차 새로이 출범할 이명박정권을 ‘이념을 넘어서는 실용정권’으로 규정하는 평가는 피상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그 인식,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마치 이념과는 관계없는 듯 행세하면서 현실

을 강하게 지배하는 신자유주의 권력의지에 스스로를 복속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좀 더 그 경계를 엄밀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이명박정권의 성격과 관련하여, 그것을 신보수라고 규정하면서 신개발주의, 중도를 포괄하는 실용주의, 친기업적인 신성장주의적 정책기조를 추진할 것이라는 류(類)의 평가들이 존재한다. 여기서 신보수는 과거의 구반공주의적 보수나 ‘안보형 보수’와는 구별되는 ‘시장형 보수’ 혹은 ‘신자유주의적 보수’이다.

이러한 평가는 이른바 새로운 집권세력의 ‘구보수’와의 차이점, 따라서 그 변화를 설명해 줄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압도할만큼의 한계 또한 지니고 있다. 그것은 신개발주의, 실용주의, 그리고 신성장주의가 이른바 ‘중도개혁주의정권’인 노무현정권의 정책을 관통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은 ‘신보수’와 이른바 자유주의개혁정치세력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효과적으로 드러내주지 못한다. 나아가 이러한 규정은 ‘87년 체제의 종말’과 글로벌 신자유주의 시대를 그 역사구조적 조건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모순적이라는 비판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들다. 왜냐하면 ‘87년 체제’는 이른바 개혁자유주의 정치세력과 이른바 수구정치세력의 타협에 의해 형성된 체제로 그것의 종말은 바로 그들이 추구한 ‘역사적 과제’가 일정 정도 완료, 마무리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무현정권이 수차례 민주주의의 대강이 완료되었다고 역설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97년 이후 글로벌 신자유주의의 지배는 이른바 개혁자유주의정치세력이 지니고 있던 상대적 진보성을 탈각시켜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중요한 것은 ‘신보수’와 ‘구보수’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무현정권으로 상징되는 집권 자유주의정치세력과 이번 대선을 통해 새로운 집권세력의 주류를 형성하게 된 이른바 ‘신보수’와의 경계가 더욱 희미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다. 즉 집권 자유주의정치세력의 외부에 신보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신보수의 또 다른 한 부분으로 재구성된 것은 아닌가’라고 묻고 숙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된 현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단지 ‘반공’, ‘평화’, ‘개혁’이라는 범주를 끌어들여 그들 사이의 차이를 계속 부각시키려는 시도는 정치를 주의주의의 영역에 가두어두려는 기존의 행태를 답습하는 것에 불과하며, 그것은 그 의도와 무관하게 이번 대선에서 자유주의정치세력들이 패배한 진정한 이유를 볼 수 없게 만드는 장막으로서 기능할 뿐이다.

#### 4. 집권 자유주의정치세력의 패배 이유와 향후 정치적 행보

이번 선거에서 집권 자유주의정치세력은 몰락하였는가. 대선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답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들이 얻은 득표율은 26.14%로 지난해 5.31지방선거의 광역의회 비례대표득표율에서 열린우리당이 얻은 21.2%보다는 높다. 하지만 이번 선거가 대통령선거라는 점, 투표율이 당시보다 10% 이상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거의 대동소이한 득표율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다 이들 세력이 신자유주의 정치세력으로 전화한 이후 한나라당과의 차별성이 거의 사라진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득표율은 현재의 자유주의정치세력이 독자적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득표라고 여겨진다. 한마디로 이들은 이번 대선에서 기존의 지지선을 방어한 것이고 그들이 말하듯 ‘질서 있는 후퇴’를 위한 기반은 확보하였다. 물론 그것이 질서 있게 이루어질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그렇다면 역사적 과제의 수행 주체라는 측면에서는 어떠한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최소한 지금 이들이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의 예로 창조한국당 문국현후보는 이른바 ‘범여권의 단일화’라는 내외의 압력을 거부하고 기존의 여권을 ‘구정치세력’으로 규정하며 독자출마함으로써 기존 자유주의정치세력들이 전면적으로 재구성될 수밖에 없는 막다른 지점에 도달해 있음을 반증해 주었다.

이러한 상황의 조성은 이들 자유주의정치세력이 다시 집권할 수 있을까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이들은 단 한 번도 단독으로 집권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들은 3당합당, DJP연합 등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번 선거에서도 평화개혁세력연대, 혹은 ‘반부패연대’ 등을 매개로 ‘반한나라당 단일화전선’의 구축에 집중하였던 것이다. 물론 노무현정권이 국민통합21의 단일화합의 파기로 단독집권을 하지 않았었느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 ‘행운’이 곧 ‘불행’의 시작이었음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이의제기라고 할 수 있다. 노무현정권의 경우, 새로 출범하는 권력에 주어진다든 야당과의 밀월기간은커녕 출범 순간부터 수구사회정치세력의 공세에 시달려야 했다. 그것은 이들 자유주의정치세력의 독자적 지지기반이 얼마나 취약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겉으로만 호언장담하는 이 새가슴의 자유주의정치세력은 결국 한나라당에 대연정을 제안한 것 아닌가.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이들 단독의 재집권 가능성은 매우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엇을 가지고 집권을 위한 ‘플러스 알파’를 만들 수 있을까가 관건이다.

그렇다면 작년 지자체 선거에 이어 이번 대선에서 완패한 이들이 다가올 4월 총선거에서 자신의 입지를 만회할 수 있을까. 다수의 언론과 평론가들은 ‘친노파’와의 단절 실패와 ‘도로 열린당’으로의 회귀 등을 이들이 참패한 핵심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른바 ‘노무현프레임’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고 따라서 그들이 제시하는 해법은 여전히 ‘탈노무현’이다.

너무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어서 의문의 대상조차 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평가를 논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무현프레임’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무현프레임의 한 손에는 신자유주의가, 다른 한 손에는 개혁이 놓여 있었다. 그러나 양자가 동일한 위상을 지니는 것은 아니었다. 97년 IMF위기를 계기로 등장한 김대중정권 이후 자유주의정치세력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역사적 임무는 신자유주의를 국가사회의 운영원리로 구체화시키는 것이었고 그 후미에 이른바 ‘4대개혁입법’으로 상징되는 개혁과제의 목록이 부가되어 있었다. 여기에서 ‘부가된

것'이라는 언술이 의미하는 바는 전자가 글로벌신자유주에 지배되는 현재의 사회관계들, 권력관계들에 의해 규정된 것인 반면, 후자의 개혁과제는 브레튼우즈시대에 이들이 헤게모니적 민주화운동세력이었다는 경력에 의해, 즉 과거의 사회관계들과 권력관계들의 잔영에 의해 작성된 목록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따라서 후자는 전자의 실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긴장과 갈등을 상쇄하는 대중무마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또한 이들 집권 자유주의정치세력에게 내재화된 민주주의가 최소민주주의의 연장선 위에 있었기에, 나아가 이들은 현실적으로 거의 모든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었기에 '부가된 개혁과제'는 이들에게 더 이상 절실한 것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자임하며 개혁정권, 민주주의정권임을 강조한 이들은 그 개혁과제를 야당의 '수구성'을 대중에게 폭로하는 기제로, 혹은 그들과의 정치적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선거용 무기로 활용하였을 뿐, 그것을 온전하게 실현시키기 위한 진지한 정치적 행보는 취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어느 것도 실현되지 않은 가운데 길게는 10여 년 동안 지속된 개혁입법을 둘러싼 지루한 공방은 대중에게 피로와 염증을 일으키는 구실만 하였다. 이른바 '개혁피로증'이 조성된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상황은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의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는데, 그 이유는 집권 자유주의정치세력이 자신들을 '정통 민주화운동세력'으로 자임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개혁'에 대한 대중의 피로와 혐오는 '민주주의'에 대한 그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와 달리 이들은 신자유주의개혁은 충실하게, 아니 과도할 정도로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노동관계법과 한미FTA 등은 단적인 예이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자신들이 수구세력이라고 비판했던 야당과 거의 갈등하지 않았다. 신자유주의와 관련된 각종 법안들은 이들 두 정치세력들 사이의 공조로 일사천리 관철되었고 거기에는 민주노동당, 민주운동, 그리고 시민운동들의 온건한 요구조차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 이 속에서 그래도 과거에 민중의 권리를 외쳤던, 그리고 그 민주화운동의 적통을 자임하는 세력을 선택하면 삶이 나아지겠거니 생각하며 그들을 지지했던 일반 대중들은 자신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게 되자, 점차 이들로부터 떨어져나가 '묻지마 반대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는가?!"라는 자조와 비아냥거림을 대중 속에 확산시키며 가속화되어 집권 자유주의정치세력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물론, 민주주의 일반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결속력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바로 이것이 '노무현프레임'의 현존 모습이라면,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지지층, 혹은 우호층을 재결집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제기된 '탈노무현프레임'의 모습은 어떤 것일 수 있는가. 단순화시켜 말한다면 그 핵심은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을 경과하며 신자유주의가 제반 사회관계들 속에 강제한 긴장과 모순들을 완화, 해소시키기 위한 틀을, 이제는 만신창이가 된 4대개혁입법과 같은 개혁의 내용을 재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탈노무현프레임의 구축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그들이 과연 그와 같은 과제를 수행, 실현할 수 있는가이다. 이미 10년 이상을 집권하며 신자유주의를 자신의 핵심적인 정체성으로 내재화시킨 집권 자유주의정치세력에게 그러한 요구는 스스로 넘을 수 없는 구조적 경계의 저 바깥으로 나가라는 것 이외에 다른 그 무엇도 아니다. 정치적으로 자신의 ‘계급적 이해’를 넘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것은 오히려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상대적이지만 그나마 개혁적이라고 평가되었던 것보다도 후퇴한 정책들을 제시하는, 따라서 한나라당의 정책들과 차이를 분간할 수 없는 미봉적 정책을 들이대는 행태 속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주변적이었던 개혁입법이 더 이상 그들의 안중에서 없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런 측면에서 기존의 집권 자유주의정치세력에게 ‘탈노무현프레임’의 구축을 주문하는 것은 정치를 주의주의(voluntarism)의 영역에 묶어두려는 것으로 여전히 그들에게서 그 어떤 진보성, 개혁성의 가능성을 찾고 싶어 하는 과거에 근거한 희망, 기대의 과잉표현이라 할 수 있다.

대통령선거일이 되었다. 노무현대통령의 탄핵 이후 집권 자유주의정치세력을 과반 이상의 압도적 다수당으로 만들어주었음에도 사학법 하나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정치세력에게 혁명적 발상으로의 전환 없이는 불가능할 정도라는 난맥상의 교육 문제를 어떻게 맡기겠는가. 국보법 하나 전향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아니 오히려 필요에 따라 그것을 이용하여 대중운동을 억압하는 정치세력의 ‘대북포용정책’을 누가 신뢰하겠는가. 비정규직노동자 및 이주노동자문제, 환경 및 생태문제는 말할 것조차 없다. ‘야당과의 대화를 통한 선진민주정치의 구현’을 위해 불가피하였다고 변명하든 누가 그것에 고개를 끄덕이겠는가. 단 한 치라도 민주주의가 말로 진전되었다는 역사의 기록이 있는가. 개혁으로 상징된, 최소한도의 할 수 있는 과제조차 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추진력 빈곤의 무능한 세력’으로 낙인찍혔고 그들에 우호적인 세력조차 발길을 돌렸다. 바로 여기에서 ‘말이 아니라 실천하는 정치인’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이명박후보의 호소에 대중들이 ‘맞아, 그래도 이명박은 한다면 했어.’라고 호응한 것이 의미하는 바를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대선 패배는 이미 예고된 자업자득인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집권 자유주의정치세력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따라서 이른바 수구정치세력과의 차별성을 ‘평화·개혁세력’이라는 언술에서 찾고자 하였다. 하지만 그것 또한 대중적 호소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87년식’ ‘민주 대(對) 반민주’의 구호로 한나라당을 반평화, 전쟁수구세력으로 몰았지만, 그들의 열렬한 후원자인 DJ조차 ‘한나라당의 집권’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공포분위기를 조장하며 돕고자 하였지만, 이미 몇 차례 ‘북풍(北風)’의 효과를 학습한 대중의 반응은 냉담하였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한나라당이 ‘신대북정책’을 제시하여 집권 자유주의정치세력으로의 수렴이 이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 이유는 ‘평화·번영’을 상징하는 개성공단이 신자유주의에 대응할 수 있는 프레임이 아니라 그 프레임 안의 하나의 부분이라



는 점에 있었다. 그 핵심은 ‘신자유주의 분업체제에 북한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에 있었기에 그것은 신자유주의의 하위정책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했던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하위정책으로 그 상위의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문제점들을 해소시키겠다는 논리는 설득력을 지닐 수 없는 것이다. 특히 그 성과가 여전히 불투명하고 장기적인 시간을 필요로 하는 북한과의 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그것이 지금 고통 받는 대중에게 현실적인 대안으로 다가가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불도저 이명박’이 추진하는 대운하건설 공약이 더 현실적이었을 수도 있다.

둘째, 대중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정작 평화를 파괴하는 주요인이 남북한 사이의 불편한 긴장관계라기보다 자본, 시장의 논리로 무장한 신자유주의에 있었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정치세력은 여전히 국가 간 전쟁상태의 부재를 평화로 생각하고 고전적인 발상의 한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였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이른바 수구정치세력이 그 한계에 민감히 반응한 것은 아니다. 그들은 더 완고한 국가주의, 민족주의 이에올로기로 무장한 신자유주의자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집권 자유주의정치세력이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대북정책의 긍정적 성과를 말하며 대중의 지지를 호소하고, 다른 한편으로 수구 한나라당의 집권이 남북관계를 위기에 빠뜨려 ‘평화와 번영’을 위협할 것이라고 역설했을 때, 그것은 매우 모순적인 것이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만일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상황이야말로 노무현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해 ‘퍼주기식 대북정책’이라고 비판해왔던 한나라당의 비판이 옳았음을 반증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정책의 적절성은 대내외적 위기관리의 상황에서 판명될 수밖에 없는데, 역설적으로 수구 한나라당의 집권으로 남북한관계가 위기로 치닫는다면 그 동안의 햇볕정책, 대북포용정책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미 ‘북풍’에 대해 학습하며 일정 정도 면역되어 있던 대중은 한나라당의 집권이 한반도에서 위기를 조장하고 전쟁분위기를 조성할 만큼의 중대한 정책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인식하지 않았다. 따라서 남북한관계의 진전을 통한 ‘평화, 번영’의 담론을 통해 이른바 수구정치세력과의 차별성을 드러내고자 했던 집권 자유주의정치세력의 시도는 대중에게 주변적인 문제로밖에 다가가지 못하였다.

일반적으로 삶 그 자체에 등이 휘어 고통 받는 대중은 삶의 고통과 미래의 불안을 강제한 가시적 정치권력을 가장 중요한 비판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반면, 그 고통을 해소시켜주겠다는 선전과 선동에는 강하게 이끌린다. 더군다나 ‘신자유주의의 길’만이 실현가능한 활로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즉 ‘진보적 대안’이 의미 있는 대중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지 못한 상태라면, 그들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는 명약관화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자유주의 정치세력들의 향후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그들에게는 두 가지 길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 하나는 지난 대선과

정에서 그들 가운데 일부가 이미 보였던 모습처럼 이제는 커다란 차이가 없는 한나라당, 혹은 무소속 이회창의 흐름에 동참하여 ‘금뱃지의 권력의 맛’을 이어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것이 야기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자기 것으로 삼으면서 그러한 문제를 완화, 해소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정치적 행보를 선명히 이동시키는 것이다. 전자는 지금 지배적인 ‘신자유주의 우파’의 길을, 후자는 ‘신자유주의 좌파’- ‘좌파 신자유주의’가 아니다. 좌파에 어떻게 신자유주의가 존재할 수 있는가-의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한다. 이 후자의 길은 신자유주의를 사회구조적인 차원이 아닌 사안별 정책의 수준에서 이해하는 세력이 중심이 될 것이며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 범여권으로 분류된 바 있으나 독자적인 길을 걸은 창조한국당의 정책 내용과 상당한 친화성을 보일 것이다. 기우에서이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특정 정치세력, 특정 당, 특정 리더를 중심으로 결집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모일 것인가이다. 다가올 4월 총선을 통해 후자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다면, 이들이 ‘중도개혁정치세력’의 새로운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 경우, 진보정치세력이 새로운 변화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지 못한다면, 신자유주의 우파와 ‘좌파’가 향후 정치를 지배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항상 제기되는 문제이지만, 혹시 이들이 진보정치세력과 연대할 가능성은 없는가이다. 여전히 ‘개혁진보세력’ 혹은 ‘진보개혁세력’이라는 용어를 통해 양자를 뭉뚱그려서 사용하는 논의들이 적지 않은 현실을 볼 때, 이러한 기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미리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집권 자유주의정치세력은 역사적인 몰락의 와중에서도 진보정치세력을 그들의 재집권을 위한 들러리로서만 취급하였을 뿐이다. 양자가 정치적으로 함께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이른바 ‘후보단일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진보를 양념처럼 계속 호명하였다. 물론 이들의 이런 행태가 ‘반한나라당 전선’의 구축에 집착하는 이른바 진보진영 내부의 ‘자주파들’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고려한 것이었다면, 나름의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일정한 성과도 거두었다. 하지만 이들의 정치적 관심은 여기까지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오히려 스스로를 다듬어야 하는 세력은 진보정치세력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이 있다. 그것은 자신들을 ‘중도개혁민주주의자’로 포장해 대중에게 소개해 왔던 집권 자유주의정치세력들이 스스로를 ‘좌파신자유주의정권’이라고 언급했던 사실인데, 새삼 지금 이를 불러내는 이유는 그러한 규정의 적실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논란의 와중에 형성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재고해 보기 위해서이다.

사실 집권 자유주의정치세력이 ‘좌파신자유주의’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좌파’였다. 그 이유는 이미 주어진 것으로서의 신자유주의는 그들에게 문제시할 수도, 건드릴 수도 없는 구조이자 관계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애초 ‘좌파’는 ‘중도개혁민주주의’의 또 다른 이

름으로 이른바 수구정치세력에 대비된 신자유주의 안의 ‘좌파’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가 삶의 고통을 야기한 가장 중요한 원천이라는 호소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 오히려 그것의 확대심화가 일자리를 통한 성장과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현되지 못하는 이유가 ‘좌파정권의 무능’에 있다고 역설하는 이른바 ‘수구정치세력’의 선동에 이끌린 다수 대중은 그 신자유주의를 ‘말만 앞세우는 무능한 좌파의 사슬’로부터 분리시킬 것을 결의, 혹은 묵인하였다. 그렇게만 된다면 현실의 고통은 완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논란의 와중에 어느새 좌파가 ‘무능한 중도개혁민주주의자’로 되었다는 점이다. 여기에 진보정치세력이 이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이유가 담겨 있다. 그것은 ‘좌파신자유주의정권’을 자임한 집권 자유주의정치세력이 그러한 담론을 통해 한편으로 현존하는 좌파정치들을 조롱, 희화시키면서, 다른 한편 신자유주의의 대중적 영향력을 더욱 강화시켰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자신들이 대중들에게 부가한 삶의 고통과 그것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오히려 그 책임과는 직접적으로 거리가 먼 ‘좌파’라는 이름을 차용하여 정당화하면서 ‘신자유주의보수대연합’의 정치를 공고히 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극대화시켰던 것이다. 바로 이것이 ‘노무현정부가 이명박정권을 탄생시킨 일등공신이라는 세간의 평가’로부터 진보가 끄집어내야 하는, 다른 한편 진보가 자신의 무능을 부끄러워하고 와신상담하며 잊지 말아야 할 정치적 교훈인 것이다.

그렇기에 대선이후 만난 이들 두 사람이 한미FTA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의기투합하기로 한 것에 담겨진 정치적 상징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또한 이 지점에서 왜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이 집권 자유주의정치세력들의 그것에 비례하여 등락을 함께 하였는지 다시 한 번 더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어쨌든 사정이 이렇기에 지금 집권 자유주의정치세력은 홀로일 수밖에 없으며 그들은 이미 언급한 두 가지 길 사이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해야 할 막다른 지점에 놓여 있다. 과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느 길로 걸어갈 것인가. 그들 나름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자 한다면, 그 선택지는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러한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줄지는 그 재구성의 내용과 방식이 어떤 강도를 지니는가에 달려 있는 만큼 그 행보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 5. 진보의 완패와 진보정치세력의 재구성

이번 선거에서 완패한 세력은 진보정치세력이다. 그 동안 민주노동당, 사회당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이들 정당의 재편,

향후 정치적 행보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진정성 있는 비판이 먹히지 않을 정도로 ‘화석화된 정당’으로 인식되고 있는 민주노동당에 바라는 것은 최소한 진보정당에 부합되는 행보를 걸으라는 것이다. 굳이 “제도정당은 어쩔 수 없어!”라는 낡은 비판에 기대고 싶지 않다. 또 그 제도의 경계를 넘어서라고 말하지도 않겠다. 그것은 민주노동당, 혹은 사회당의 몫이라기보다 ‘더 많은 진보, 더 많은 민주주의’를 목표로 제도/비제도의 경계를 헐어야 하는 ‘운동정치들’의 몫으로 계속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신대북정책 한 방에 끝난 완고한 민족주의, 코리아연방, 그리고 말의 성찬뿐인 환경 및 생태문제에 대한 언급, 북핵문제의 와중에서 드러난 평화에 대한 놀라울 정도의 몰상식, 장애인과 이주노동자 등 소수자 차별에 대한 무지와 감수성 빈곤 등은 그 열렬한 지지자들, 우호자들에게조차 민주노동당을 진보정당으로 호명하는 것을 망설이게 만들었다. ‘비정규직노동자의 당’이라고 외쳤지만, 비정규직법의 통과 과정에서 보인 비밀관성과 동요 이후 민주노동당의 그러한 외침은 의구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다.

지금 민주노동당을 대표하는 두 정파들, 이른바 ‘평등파’와 ‘자주파’가 과거에 뿌렸던 땀과 눈물로 현재 자신들의 진보성을 증명하고자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시대착오적이다. 굳이 ‘87년 체제’의 종말을 언급할 필요도 없다. 민주주의와 진보는 과거를 묻지 않기 때문이다. 현실의 비대칭적, 억압적 사회관계들을, 따라서 그 안에 내재된 권력관계들을 넘어 그것들을 끊임없이 재구성하고자 하는 민주주의, 진보는 오직 지금 이 순간 그러한 관계의 어디에 서 있는가를 유일한 판단의 준거로 삼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민주노동당은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안타까운 심정이다.

한국사회당은 어떤가. 그 대선후보는 어떤 과정을 거쳐 선출되었는가. 그것이 내세운 ‘사회적 공화주의’는 또 어떻게 해서 탄생했는가. 그에 대해 대중은 물론 그 당원들조차 의아해 한다. 지금 이 사회에 공화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은 없으며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그 ‘사회적’이라는 수식인데, 그것은 결코 새로운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양한 사회관계들에 내재한 차별과 배제를 제거하자는 ‘급진민주주의’의 또 다른 정치적 판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많은 사람들은 사회당이 환호한 창조한국당의 ‘사람중심 진짜경제’가, 그에 근거한 대강의 경제정책들이 ‘사회적 공화주의’와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 ‘사람중심 진짜경제’에 대해 보였던 공감과 환호는 자유이지만, 여전히 중요한 것은 자유주의정치세력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사람일반, 인간일반이 아니라 지금 분열된 역사적 사회관계들, 그 안에 내재된 권력관계들과 정치들에 대한 성찰이다. ‘사람중심 진짜경제’가 ‘사회적 공화주의’로 표현된 사회당의 ‘급진민주주의’와 상통한다고 생각하여 거기에 친밀감을 표현하였다면, 지금 사회당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최소한 급진민주주의는 노동과 자본의 모순과 적대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볼 때, 과연 지금의 창조한국당이 그런 급진민주주의를 자기 것으로 삼고 있는가.

선거가 끝난 지금, 한국사회당은 민주노동당 등에 대해 이런저런 논평을 하기보다 이번 대선과정에서 자신들이 보인 정책과 정치적 행보에 대한 냉철한 성찰이 더 필요하다. 이번 대선에서 획득한 0.07%의 지지율이 사회당의 참모습을 온전하게 드러내주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공당으로서의 사회당의 위상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증거로서는 더 이상 보완할 것이 없는 충분한 수치이다.

이런 맥락에서 대선의 완패자는 이른바 집권 자유주의정치세력이 아니라 진보정치세력이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자유주의정치세력은 이번 선거에서 받을 만큼 받았고 그들은 그동안 세 차례의 집권을 통해 자신들이 수행할 역사적 과제를 마무리하였다. 그들은 '실패한 정권'이 아니며 그들 자신 또한 그렇게 생각지 않고 있다. 자신의 성격은 그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알기 때문이다. 다만 과거에 연연하며 그들을 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만이 그렇게 말할 뿐이다. 이제 그들에게는 수구정치세력이라고 역설하던 한나라당과의 차이보다 공통성이 더욱 많아 졌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이것이 그들 사이의 타협에 의해 형성된 '87년체제'가 종말을 고했다는 것에 담겨 있는 핵심이며 지금 '실용주의'가 회자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이번 선거는 63.8% 대(對) 26.2%+3.0%+0.07%가 아니라 63.8%+26.2% 대(對) 3.0%+0.07%, 즉 90% 대(對) 3.07%인 것이다. 좀 더 변화의 가능성을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창조한국당을 '범신자유주의'에 포함되는 정치세력으로 규정할 경우, 그 패배의 골은 더욱 깊다. 이들이 투표자의 96%, 전체유권자의 60.03% 이상을 획득한 것이다. 이러한 지표의 해석과 관련하여 한 가지 숙고해야 할 논쟁점은 '대중이 보수화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둘러싼 평가이다. 한편으로 집권 자유주의정치세력의 개혁성에 주목하는 논의들은 대중의 보수화를 부정하는 경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이미 지적한 바대로 이른바 '자유주의개혁정치세력'이 내용적으로 보수화된 상황을 부정하면서 단지 그들에 대한 대중의 지지율을 근거로 하여 그들에게 개혁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은 본말을 전도시킨 평가라고 할 수밖에 없다. 대중의 정치적 행보는 가변성을 지니고 있지만, 지금 글로벌 신자유주의가 압도하는 상황에서 그들이 보이는 정치적 가변성의 폭은 매우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치적 행태 또한 현실의 지배적인 사회관계들을 수용, 추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들이 보수화의 길을 걷고 있다는 점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진보정치세력의 이 초라한 득표는 이를 반증하는 것 아닌가. 그들에 대한 이러한 규정이 그들 대중의 지지를 재차 획득하기 위한 자기성찰과 변화, 실천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이상, 그들을 객체로 대상화시키는 엘리트주의의 표출로 이해할 필요 또한 없다. 이러한 접근이야말로 대중을 신비화시키는 것이다.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보다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대면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 초라한 3.07%를 가지고 진보정치세력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아직도 좌고우면할 일이 남아 있는가. 진정 대중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면, 그리하여 그들의 관심을 '더불어 사는 관계'에 대한 관심의 방향으로 구부리고자 한다면 진보

정치세력에게 남은 것은 자신을 버리고 스스로를 재구성하는 길밖에 없다.

첫째, 그 방법이 어떠한든 민주노동당은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고한 자주파’들이 지닌 발상들, 행태들과 단절하는 것이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들이 글로벌 신자유주의가 증폭시키는 계급문제를 민족, 국가의 틀 속에 가두어 연대의 장애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이들이 최소한 급진 민주주의적인 소양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이들은 환경 및 생태, 평화, 여성, 이주노동자 등 소수자 문제 등을 자기문제로 삼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물론 이러한 한계를 지닌 ‘완고한 평등파’도 자기성찰과 반성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민주노동당 안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북주의’는 단지 북한의 정치엘리트들과 이념적인 일체감을 공유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당의 중요사안을 결정하는 행태를 이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진보의 가치와 내용을 자기화하지 못하는 ‘완고한 자주파’의 한계를 드러내 주는 상징적 언술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적 입장’에서 말한다면 이것은 이른바 내재적 접근론을 극단화시키는 발상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한계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 ‘완고한 자주파’와의 단절은 그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이른바 자유주의개혁정치세력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이들에게 미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그들의 영향력으로부터도 확실히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 그 재편의 과정에서 사회당 등과 통합할 필요가 있다. 변화를 전제로 한 민주노동당과 한국사회당의 강령은 내용상 서로 함께 하지 못할 정도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사회당의 강령과 정책은 충분히 고려, 수용되어야 하지만, 이 통합은 총선용의 지분나누기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셋째, 제도정당 외부에 존재하는 ‘계급정치세력’과 급진민주주의적인 정치세력들, 혹은 ‘계급좌파’와 ‘비계급좌파’ 또한 이러한 움직임을 외면하지 말고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과거와 같은 ‘제도정치=개량주의’라는 낡은 혐오는 금물이다. 이미 언급했지만, 그 한계는 자유주의정치세력들과 그들의 정치학이 강제하고자 하는 ‘제도정치/비제도정치라는 경계’를 흐트리고 재구성하는데 민감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영역의 운동정치들이 고민하고 넘어야 할 숙명과도 같은 과제이기 때문이다.

넷째,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가 재검토, 철회되어야 한다. 지금 배타적 지지는 오히려 노동운동은 물론 진보정치의 보수화, 조합주의화를 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의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논의 과정 속에서 현 민주노총지도부가 보인 인식과 행태는 이를 확인시켜 주기에 충분하다. 오히려 대중은 민주노총을 더 문제시하고 있다.

다섯째, 이러한 변화에 기존 진보정당의 대중적 명망성과 영향력을 지닌 리더들이 동참하도록 최대한 요구할 필요는 있지만, 결코 그들에게 연연해서는 안된다.

‘넓은 틀’에서 비상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인물보다는 바로 그 넓은 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이 진보정치세력에게 완패를 안겨준 대신 마련해준 새로운 실천을 위한 반성의 시간을 어떻게 자기화할 것인가. 진보정치세력의 거듭남을 위한 프로젝트가 4월에 있을 총선 대응용으로 축소, 환원되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그 계기를 그냥 놓쳐서도 안 될 것이다. 시간은 마냥 진보정치세력을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기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

## 6. 초심(初心), 진보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진보란 무엇인가. 기존의 비대칭적, 억압적인 사회관계들을, 따라서 그 안에 내재되어 작동하는 권력관계들을 더 호혜적인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진보이다. 바로 이렇기에 근대정치에서 진보와 민주주의는 분리시킬 수 없는 쌍생아로 존재해왔다. 민주주의는 법, 제도를 지키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반영된 기존의 사회관계들 속에서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로 수탈당하고 소수자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억압받는 사람들의 아우성이다. 역사적 사회관계들을 매개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자연, 생태의 살려달라는 외침 그 자체이다. 이러한 관계들을 중심에 놓지 않는 순간, 진보는 안개처럼 사라져 버린다. 역사는 자기지배라는 민주주의의 원리와 실제로는 그 어떤 동일성의 정치로 나타나는 ‘현실 민주주의’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과 모순의 끈을 놓는 순간, 그것을 넘기 위한 실천이 대중과 공유되지 않는 순간, 진보가 의미 있는 존재로 재생산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지금 ‘진보’에게 그 민주주의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또 어떠한 방식으로 실천되고 있는가. 그리고 대부분의 역사 속에서 이런 의미의 진보, 민주주의는 항상 소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살아가기 힘든 조건 속에서 진보, 민주주의를 부여잡고 씨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은 분열된 사회관계들에 더욱 천착하면서 진보의 언어와 틀을 재구성하기 위해 무게 있는 첫발이, 따라서 진정성 담긴 ‘초심’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 2007년 대선, 진보·개혁 진영은 무엇을 배울 것인가

박순성 (참여연대 운영위원장·동국대/북한학)

### 1. 잘못된 정책과 실패한 정치

- 2007년 대선에서 여권의 정동영 후보는 유효투표수 중 26.14%를 차지하였다. 이는 지난 5년 동안 노무현 정부의 정책집행과 정국운영이 국민들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 경제지표 전반에 대해, 개별 정책에 대해, 국면에 따른 정국운영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함

항목	1993	1995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국내총생산 (실질성장률, %)	6.1	9.2	4.7	-6.9	9.5	8.5	3.8	7	3.1	4.7	4.2	5
국내총소득 (%)	6.3	9.6	2.9	-7.2	8.9	4.7	2.6	6.7	1.9	3.8	1.1	2.1
국민총소득 (%)	6.3	9.5	2.7	-8.3	9.4	5.5	2.8	7	1.9	3.9	0.7	2.3
최종소비지출 (실질증감률, %)	5.9	9	3.2	-10.6	9.7	7.1	4.9	7.6	-0.3	0.4	3.9	4.5
수출입의 대GNI 비율(명목, %)	54	61	68	84	75	82	77	72	76	86	85	89

- 진보진영과 개혁진영의 총 득표율은 35.0%(이인제 포함 35.7%)이며, 보수진영의 총 득표율은 63.8%(허경영, 전관 제외)이다. 진보·개혁 진영 전체의 낮은 득표율은 진보·개혁 진영 전반의 실패를 의미한다.
- 노무현 정부의 실패가 진보·개혁 진영에 대한 지지도의 하락을 가져왔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음
  - 정통 진보인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도의 하락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투표율은 63.0%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대통령직선제 실시 이후 가장 낮다. 이러한 낮은 투



표율은 한국 민주주의가 잠재적 위기 상태에 빠져있음을 보여준다.

- 최근 10 년 간 투표율 하락은 심각한 수준이며, 민주주의가 복원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낮은 투표율은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음;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투표 자체와 민주적 정치체제에 대한 의무, 정당과 정치 자체에 대한 신뢰, 사회/공동체와 타인/주변에 대한 관심 등이 저하되었음을 보여줌
- 여러 복잡한 논의를 제외하고 단순히 추론하면, 투표의 정치적 효능이 높을수록 투표 참가율이 높을 것이므로, 현재 국민들이 느끼는 투표의 효능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음;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및 지방 선거에서도 투표율이 매우 낮은 것은 정치에 대한 신뢰의 상실을 의미함
- ※ ‘지역주의’에 의한 규정성 때문에 국회의원 및 지방 선거에서 투표율이 더 낮을 것이라고 판단할지도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회의원 및 지방 선거에서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투표율이 더 낮았음(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제외)

선거 유형	투표율 (%)		
12대 국회의원총선거(1985.2)		84.6	
13대 대통령선거(1987.12)	89.2		
13대 국회의원총선거(1988.4)		75.8	
14대 국회의원총선거(1992.3)		71.9	
14대 대통령선거(1992.12)	81.9		
1회 전국동시지방선거(1995.6)			68.4
15대 국회의원총선거(1996.4)		63.9	
15대 대통령선거(1997.12)	80.7		
2회 전국동시지방선거(1998.6)			52.7
16대 국회의원총선거(2000.4)		57.2	
3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02.6)			48.9
16대 대통령선거(2002.12)	70.8		
17대 국회의원선거(2004.4)		60.6	
17대 대통령선거(2007.12)	63.0		

- 정동영 후보의 패배, 나아가 진보·개혁 진영의 퇴조는 진보·개혁 진영의 정책 및 정치 실패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의 정치 실패를 보여준다.
- 이런 점에서 진보·개혁 진영의 실패는 이중적(진영 차원, 사회 차원)임
- 상대적으로 보수 진영은 진보·개혁 진영에 비해 ‘정치적 동원’ 또는 ‘정치적 기대 제고’에 성공하였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럴 경우 양 진영 모두 투표하지 않은/않는 사람들의 성향과 투표율 저하의 원인에 대해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음

- ☞ 정상호(“‘새로운 중심’의 건설: 강령·리더십·정당의 창조적 전환”, 2007.12.2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토론회 발표문)는 대선 패배의 일차적 원인을 진보·개혁 진영의 ‘정치적 지체 현상’에서 찾으면서, 정치적 지체의 핵심 현상으로 ‘사회경제적 의제를 중심으로 비전과 실행력을 갖춘 정책·정당·리더십의 허약성’, ‘목전의 사회양극화에 대한 대처는 중장기 전망과 정책으로 미루고,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과거 의제에 당정이 집중하는 양상의 반복’을 들고 있음; 이러한 비판은 진보·개혁 진영 시민·사회단체에도 적용될 수 있음.

※ 달리 표현하면, ‘정치 과잉’으로 인한 ‘정치 실패’, ‘정책 실패’

#### □ 몇 가지 추가적 언급

- 진보·개혁 진영의 관점에서는 지난 4 년 동안의 정책·정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35.0%에 달하는 지지율이 나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시민사회의 진보·개혁 진영도 정치공학적 사고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반성이 필요함; 당연히 후보단일화라는 정치공학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으며, 후보단일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민주화세력의 사회의식도 존재함
- 보수 진영의 득표율이 거의 1/3 정도 나왔다는 사실로부터 한국 사회가 보수화되었다고 할 수는 없음; 실질적으로 상당수 국민들은 이명박 후보를 중도적이며 개혁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자신들도 상당히 중도·개혁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이를 단순히 ‘허위의식’이라고 규정할 수 없음; 시대상황에 따라 중도·개혁, 나아가 진보의 가치와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다양한 여론주도층의 과제임

## 2. 새로운 문제들, 낡은 문제들 그리고 모호한 균열선

- “1997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와 사회에는 조용한 혁명이 일어났다.”(강명세, “60-40의 정치로의 회귀”, 2007.12.2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토론회 발표문)
- 외환위기 이후 가속화된 세계화 및 국민경제의 신자유주의적 구조 변화에 덧붙여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중국 경제의 직·간접적 영향력 증대는 한국 경제의 ‘하부 구조’에 변화를 가져왔음
  - 지난 10 년 간 한국 경제는 한편으로는 경제개혁 심화와 사회복지제도 확대를 추진해 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발주의가 지속되고(토건국가화 심화) 노동시장은 유연화·분절화되었음
  - 재산효과(부동산 및 동산)에 따른 부·소득 불평등 심화, 산업별·업종별·직종별·고용형태별 소득 불평등 심화, 고용·수입의 불안정 심화 등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현상임
- 현재 한국 사회의 근본 문제는 사회·경제적 차원의 전반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데에 있다.

- 비정규직의 대량양산은 구조화되고 있으며, 산업구조도 노동계급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수출입 의존도의 상승, 대기업-중소기업 관계의 고착, 농촌·농업 문제 지속·심화 등은 한국 경제의 구조가 쉽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없게 만들
  - 전통적인 토건국가전략에 덧붙여, 새로운 형태의 국토개발전략이라고 할 금융·상업·관광 중심의 '두바이식 성장 전략'(홍종학)이 한국 경제를 지속적으로 지배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나타나고 있는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성장을 통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재의 양극화는 성장과 함께 심화될 것이다.
- 양극화는 자본주의 체제의 전통적인 계급·계층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최근 현상은 세계화와 기술발전에 따른 축적체제 변화의 결과로 보아야 할 것임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극화는 과거(의 이중구조)와 달리 경제성장(생산력 증대, 무역 확대, 산업구조 고도화 등)과 함께 해소되지 않고 심화될 것임(홍장표)
  - 더 거칠게 말하면 양극화가 한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음
-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사회의식)의 변화는 민족문제(에 대한 사회의식)의 변화와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민족문제의 영향력은 약화되고 있다.
-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정치적 균열은 민족문제와 사회문제이며, 그동안 한국 정치 지형은 '민족문제 편향'이 있었음(강명세)
  - 김대중 정부 이후 대북포용정책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남북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국민들의 의식 차원에서 민족문제의 영향력은 상당히 낮아졌음
  - 긍정적으로 표현한다면, 대북포용정책의 원칙에 대한 국민적 합의 수준은 높아졌으며, 이제는 구체적인 정책수단과 정책집행이 문제가 되고 있음
- 지역주의는 민주화 과정에서 정치적, 이념적, 정서적(사회심리적), 사회·경제적 요인 때문에 한국 정치에 '내면화'되었으며, 단기간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 한국 민주주의에서 지역주의는 일종의 '원죄'에 해당함: 원죄는 결코 부정적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종종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함
  - 모든 문제의 원인을 지역주의에 넘겨쓰거나 지역주의를 단기간에 해결해야만 한다는 태도가 오히려 문제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음
- 새로운 문제들과 낡은 문제들이 얹혀 있어서 정치적 균열구조가 쉽게 드러나지 않을 것이지만, 진보·개혁 진영의 성공은 균열구조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드러내는 것에 달려있다.
- 민족문제 편향적인 균열구조가 2002년 대선에서는 지배적이었다면, 1997년과 2007년 대선에서는 사회·경제적 균열구조가 지배적이었다고 할 수 있음
  - 민족문제와 지역주의는 단기간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므로, 두 문제가 한국 사회의 미래

에 대해 갖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함

### 3. 어떤 가치·정책으로, 어떻게 대중과 소통할 것인가

- 경제·사회·정치·외교·문화 차원에서 변화된 한국 사회의 문제들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미래 지향적 가치에 기초한 실현가능한 정책대안을 내어놓을 때, 진보·개혁 진영에게 새로운 기회가 올 것이다.
  - 진보·개혁 진영은 그동안 ‘문제들’ 자체를 지적하는 데에는 그다지 어려움이 없었으나, 대북정책을 제외하고는 체계적 분석과 정책대안을 내어놓는 데에서는 한계를 보여 왔음
  - 현 단계에서 핵심적인 변화 또는 변화 요인: 양극화 경향의 고착화, 동북아 외교안보 질서 변화(미국패권의 약화, 중국의 부상), 한국 경제의 대외의존도 심화, 중국 경제의 성장 심화와 불안정 가능성
  -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올바른 분석과 적절한 정책대안이 필요함; 모든 정책은 목표·의도와 성과·결과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최종 단계에서는 정책의 성과·결과가 정권과 진영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됨
  - 한국 경제는 1970년대 중반과 비교할 때,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거의 6 배에 도달했음(2000년 기준으로 대략 계산하면, 1인당 국민총소득은 3,000 달러에서 18,000 달러로); 1970년대 기준으로 만들어진 사회·경제 정책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외환위기 이후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와 세계화의 영향력으로 국민들의 의식 구조가 바뀌었음: 정치보다 경제가 중요하다는 사회의식,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조기 유학, 성·결혼 등에 대한 의식 변화; 사회·경제적 민주화 또는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정치문화가 위협을 받고 있음
  - 미래지향적 관점과 변화된 현실에 바탕을 두고 진보적 가치체계(평화, 인권, 환경, 발전 등)의 재정립, 사회경제제도와 정책수단의 체계적 재구상이 필요함
- ☞ 정상호(“‘새로운 중심’의 건설: 강령·리더십·정당의 창조적 전환”, 2007.12.2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토론회 발표문)는 ‘폐기해야 할 노선과 정립해야 할 정책’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음
  - 낡고 무능한 이미지를 주는 부정적 정책 패키지들: 삼불정책, 시민운동의 반정당적 인식과 탈정치적 노선의 폐기, 반생산력·반경쟁력·반성장주의, 반개방 담론과 민족경제론의 잔재, 무상의료·무상교육
  - 정립해야 할 정책과 전략들: 정당의 근본 개혁(핵심이슈 정당으로 재편), (지방권력의 민주화를 주도할 풀뿌리운동정치로서) 2010 프로젝트에 착수(횡적·공간적 접근), (이념적으로 중도 + 진보, 계층적으로 중산층에 기반을 둔) 한국형 이익정치의 모색(종적·계층적 접근)

□ 진보·개혁 진영이 대중과 성공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대중에 대한 존중·애정이 모든 소통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 프레임 이론(조지 레이코프)의 핵심은 ‘우리의 프레임이 맞다’고 우기는 데(자족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프레임의 과잉)에 있지 않음; 왜 우리의 프레임이 현실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함; 진정한 소통, 또는 설득과 지지 유도의 핵심은 가치, 인간적 유대, 진정성, 신뢰에 있음(소통 윤리가 소통의 성공을 가져다 줌)
- 대중들뿐만 아니라 진보·개혁 진영조차도 ‘이중개념주의자’임을 자각하고, 대중들의 사회 의식에 진지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만 함; 대중을 폄하하는 모든 생각과 말은 진보·개혁 진영의 정치인뿐만 아니라 지식인 스스로가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임

□ 진보·개혁 진영은 현실 파악과 진정한 소통을 위해 대중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 1970-80년대와 비교하여 진보·개혁 진영은 상당 정도 엘리트주의적이고 중상층 지향적이며, 또한 중앙정치를 지향하는 경향이 강함;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며, 대중의 현실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이 문제임

※ 개인적으로도 대중의 현실을 발표자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고 자신할 수 없음

■ 2007년 대선을 좌우한 보수진영의 프레임

- 낡은 가치와 이념에 집착하고 정책적으로는 무능한 ‘좌파 정부’와 선진화를 추구하고 변화를 가져다 줄 실용적이고 능력이 있는 ‘새로운 보수’
- ‘구좌파’와 ‘신보수’라는 개념 대립; 그리고 좌파에게 ‘신진보로의 변신’을 요구; 심지어 ‘신보수’에 대응할 ‘신진보’가 없음을 우려함
- 무엇이 ‘선진화’이고 무엇이 ‘신보수’인지에 대한 진지하고 구체적인 논쟁은 일어나지 않았음; 두 개념 모두 강력한 ‘프레이밍 효과’를 가지고 있었음

#### 4. 운동정치, 제도정치 그리고 싱크 탱크

□ 과연 진보·개혁 진영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진보·개혁 진영은 가치의 전선이다.

- 근대사회의 진보적 프로젝트에서 핵심 가치인 자유, 평등, 박애의 ‘종합적’ 실현을 추구하는 사람들;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참여와 연대에 기반을 둔 사회적 협력체의 실현을 추구하는 사람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이후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가치들인 연대, 평등, 환경, 평화, 인권(양성 평등, 소수자 보호 등을 포함) 등을 지구적 차원에서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특히 최근 강조되고 있는 공공성과 사회복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한국 사회의 과제인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

- 하나의 거대담론으로 진보·개혁 진영을 묶어내기란 쉽지 않음; 한국사회성격논쟁, NL/PD 대립 구도, 분단체제론 이후 한국 사회를 하나의 거대담론으로 묶어내려는 진지한 시도는 없었으며, 이는 과거에 대한 반성의 의미는 있었지만 진보·개혁 진영의 한계로 작용하기도 했음
  - 이 모호함은 약점이 되기도 하지만 강점이 되기도 함; 이미 한국 사회는 하나의 잣대로 이념 지평을 그리기는 불가능함; 가치체계의 재구성과 전망의 재구상이 필요함; 이는 기본적으로 소통의 프레임으로 작용할 것임
- 진보·개혁 진영의 기반은 제도정치와 운동정치의 역할 분담과 상호 보완을 통해 구축될 수 있다.
- 정치공학에 편향되지 않은 제도정치의 작동이 요구됨
  - 운동정치는 제도정치의 사회적 기반임; 진보·개혁 진영의 물질, 인적, 이념적 자산은 시민·사회운동으로부터 나옴
- 싱크 탱크는 정책과 담론의 산실이며, 동시에 운동정치와 제도정치를 매개하고 진보·개혁 진영을 하나로 묶어주는 고리이다.
- 내부 비판과 갈등은 있으나 적대의식과 분열로부터는 자유로운 진보·개혁 진영은 불가능한가?
  -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성찰적 분석을 체계적으로 해야 함
- 한국 사회는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 사이에 발전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때에만 사람이 살 만한 사회가 될 것이다.
- 지난 5 년 동안 진보·개혁 진영의 실패는 보수 진영에게 힘든 과제를 넘겨줌
  - 보수 진영의 성공이 한국 사회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한 뒤에 ‘성공의 역설’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매우 바람직함
  - 과연 이명박 정부가 성공할 것인지,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인지, 여전히 걱정이 앞섬

■ 진보·개혁 진영의 SWOT 분석(이태수, “2007년 대선 평가: 진보세력, 무엇을 해야 하는가?” 2007.12.2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토론회 토론문)

<div> <div>내부요인</div> <div>외부요인</div> </div>		강점	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권참여를 통한 정책생산 능력 향상</li> <li>▷ 지난 10년 담론 축적에 따른 진보 기반 일정 구축</li> <li>▷ 위기감에 따른 결집효과 발휘 가능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한 담론 생산능력 및 담론 지배력</li> <li>▷ 진보세력의 분열</li> <li>▷ 진보세력의 정치화 한계</li> </ul>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의 견제 정서</li> <li>▷ MB정권의 취약점 표출 (양극화 심화, 부동산 폭등, 경기침체, 실업률 증대, 대미종속, 부패, 반인권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안적 정책의 수립을 통해 대안세력으로서의 인정(‘준비된 세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보담론의 강고화: 이념·이론·실용 측면에서</li> <li>▶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한 연대</li> </ul>
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지구적 차원 신자유주의 팽배</li> <li>▷ ‘무능진보’에 대한 각인 효과 지속</li> <li>▷ 30% 내외의 강고한 보수옹호계층 존재</li> <li>▷ 보수언론 위시, 보수층의 기득구조 활용을 통한 ‘진보죽이기’ 공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보매체의 역할 강화 (‘선전전’ 강화)</li> <li>▶ 반신자유주의로의 지구적 차원 연대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인운동-시민운동-기층운동의 연결을 통한 진보담론 유지 및 확대</li> </ul>